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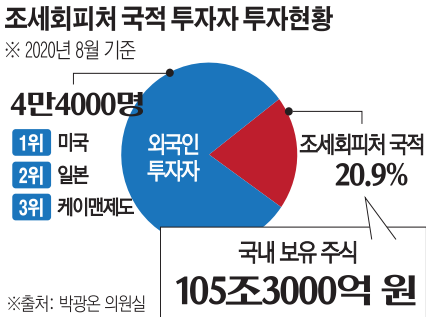
〈외국인 등록 한국인 또는 한국계 투자자〉

주식·부동산시장 쥐락펴락 ‘검은 머리 외국인’

外人 10명 중 2명 조세회피처 국적…보유 주식 5년새 32兆 ‘쑈’ 강남 아파트 시장 ‘큰손’으로…“금융시스템·정책 전면 개조해야”

‘검은 머리 외국인’이 국내 자본·금융·부동산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란 외국인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인이나 한국계 자국민 투자자를 뜻한다. ▶관련기사 3면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4378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코스피는 42.11포인트(1.60%) 곤두박질친 2591.34에 마감했다. 외국인 매도세는 1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정기 변경에 따른 것이라 게 증권가 분석이다. 한국시장

을 잘 아는 외국인이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팔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11월 한 달간 외국인이 산 주식은 5조 원에 달한다. 실제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조세피난처 자금 유입은 증가 추세다.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는 4만4318명(126개국)이다. 이 중 9269명(20.9%)은 조세회피처에 국적을 갖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105조3132억 원으로 5년 새 32조



원 이상 늘었다. 이들은 서울 강남 아파트 쇼핑시장에도 큰손으로 대접받고 있다. 대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올 1~9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오피스 등) 취득은 2555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38건)보다 14.1% 늘었다. 해외 부동산투자자문 전문기업 글로벌 PMC의 김용남 대표는 “캐나다 등 선진국에선 교포를 비롯한 ‘검은 머리 외국인’이 상당수 포함됐을 것”이라며 “아시아 국가에서는 자산가들이 강남 부동산 매입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국세청 조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외국인이 사들인 한국 아파트 규모는 7조7000억 원(2만3219명)이 2만3167채 취득)이다. 이 중 ‘검은 머리 외국인(한국 주민등록번호 보유자)’은 전체의 4.2%인 985명에 달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 관련된 범죄 정황도 있다. 국세청은 9월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탈세 혐

의가 있는 개인과 법인 등 9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중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외국인 연소자는 대부분 한국계로,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뒤에도 ‘검은 머리 외국인’이 있다는 소문이 심심찮게 떠돈다. 이수봉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위, 금감위, 검은 머리 외국인, 법무법인의 엘리트 변호사, 재벌들, 경제관료, 자유시장경제가 선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신념에 찬 정치인들이 합작해 만든 결과”라며 “한국의 금융시스템과 금융정책을 전면 개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정치 무능이 부른 ‘정치의 사법화’

뉴스 분석

꼬일 대로 꼬인 ‘秋·尹 갈등’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에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꼬일 대로 꼬여버린 상황을 풀어낼 동력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대통령으로서 혼란을 매듭짓는 ‘결단’이 아닌 원론적 언급으로는 정치의 무능이 부른 정치의 사법화로 비화된 상황을 수습할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

정치실종에 최악 갈등 속 국민은 양분 文 ‘공직자 선공후사’ 주문으로 역부족

에서다. 정치가 풀어야 할 민감한 현안을 사법부에 떠넘김으로써 빚어진 최악의 갈등 속에 국민이 양분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뜻 나서기는 힘든게 사실이다. ▶관련기사 2·8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공직자는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만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윤 총장의 언행을 부처 이기주의나 반개혁적 행위라고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다소 두루뭉술하고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뿐 아니라 ‘개혁 주체’로 나선 법무부 내부에서까지 반발이 확산된 만큼 문 대통령이 계속 침묵하거나 애매한 입장을 취해선 문제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내부의 90%가량이 윤 총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지휘를 받는 법무부 소속 직원들도 윤 총장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명령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가세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내달 2일로 다가왔지만 ‘윤석열 사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이 맞물리며 6년 연속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안 처리 이후 개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던 청와대 역시 입장이 난처해졌다. 예산안 처리 자체가 길어진 데다 여권에서조차 ‘추·윤 동반 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사실상 무리라는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관해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일환 기자 whan@



“5·18 헬기 사격 있었다”…전두환 유죄
법원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호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씨가 1심 선고 후 부인 이순자 씨와 법원을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17면 뉴시스

中企 ‘주52시간제’ 내년 1월부터 적용

이달 계도기간 종료…“연장 없다” 탄력근로제 법안 연내 처리 촉구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된다. ▶관련기사 5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올해 말이면 50~299인 사업장(총 2만4179곳)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었지만, 정부는 작년 말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고려해 법 위반 시 처벌을 면제해 주는 계도기간 1년을 부여했다. 고용부는 내년 50~29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안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됐다는 게 이유다. 이 장관은 “올해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실시한 50~299인 기업 대상 전수조사 결과 80% 이상의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다. 90% 이상은 내년 1월 ‘준수 가능’하다고 응답했다”며 “주 52시간제 시행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준수 중’인 기업이 57.7%, 작년 연말까지 ‘준비 가능’하다는 기업이 83.3%였음을 고려할 때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근로 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부는 인력 알선과 재정 지원 등의 연계 방안을 추진한다.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도 최우선으로 제공한다. 특히 이 장관은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법안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방식이다. 현재 단위 기간이 최장 3개월인데 작년 2월 노사정 합의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산업계 ‘2차 섯다운 공포’

가동중단 따른 공급난·소비위축에 수출선박 부족 ‘삼중고’

최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산업계에 2차 섯다운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공급 부족뿐만 아니라 소비심리 위축과 수출 선박

부족 현상까지 겹쳐 산업계가 삼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공장 냉각수 라인에서 근무하는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12면에 계속 송영록 기자 syr@

총장 대행·직속 과장도 ‘尹 징계’ 반기… 秋, 강행 의지

추미애-윤석열 갈등 새국면

검찰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침묵했던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와 법무부 내부도 이에 동조해 주목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궁지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 이후 검찰 내부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그동안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사사건건 부딪칠 때마다 내부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7년 만에 전국 지검과 지청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려 추 장관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지청장, 지검장, 고검장 등 고위 간부들도 가세해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 검사들의 집단행동 이후 ‘검란’이 현실화했다.

무엇보다 조 차장검사의 문제 제기는 자체로서 의미가 크다. 추 장관으로서의 뼈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성윤·김관정 등은 침묵 = 조 차장검사는 30일 검찰 내부망에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

조남관 “중대한 비위 없었다 확신”

법무부 과장들도 秋에 항의 서한

검찰 검사 ‘판사 문건’ 삭제 폭로에

징계청구 과정 두고 내부 파열음

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 달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장관님의 시대적 소명인 검찰 개혁이란 과제를 완성하려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이나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조 직정비와 인사만으로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 개혁에 대한 장관님의 헌신과 열망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씀드린다”며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발만 물러나 달라”고 촉구했다.

조 차장검사는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추 장관의 다른 측근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전국 18개 지검장 중 추 장관의 측근으



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도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추 장관의 직속인 법무부 과장들도 전날 저녁 긴급모임을 한 뒤 추 장관의 조치에 항의하는 서한을 작성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윤 총장 징계와 직무정지, 수사 의뢰 등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법무부 과장 대부분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법무연수원 교수들도 이날 추 장관의 처분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부망에 올렸다.

◇법무부 내부도 분열 조짐 = 윤 총장에 대한 검찰과 직무정지, 징계청구 과정을 둘러싸고 법무부 내부에서도 연일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검찰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전날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 수사 의뢰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1일 소집될 예정인 법무부 검찰위원회 임시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박은정 검찰담당관이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검찰담당관은 검찰관실 검사들의 기록 제공 요청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박 검찰담당관이 위원장에게 전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감찰기록은 징계청구가 된 상태이므로 검찰국으로 이관됐다”며 “감찰담당관은 현재 기록의 관리권자가 아

니다”고 해명했다.

◇尹 “회복 어려워” vs 秋 “긴급성 없어” =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통해 추 장관에 맞섰다.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 심리로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조치로 인해 검찰총장의 직무를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 전체적으로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법치주의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그 중대성을 국가의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본질적인 손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반면 추 장관 측은 검찰총장의 명예나 법치주의 등 추상적인 손해만으로는 집행정지를 결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의 법률대리인 이욱형 변호사는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판단할 징계심의위원회가 이달 2일 열리는 점을 거론하며 “당장 시급하고 긴급하게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與 “尹, 자업자득” vs 野 “國調 수용해야”

이낙연 “檢개혁 왜 힘든지 증명”

김종인 “尹 내친 이유 설명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진 상황에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권은 연일 윤 총장 패리기에 여념이 없으며, 야권은 이번 사태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정지 한 이후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왜 어려운지 요즘 검찰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며 “검란은 여러 번 있었지만 검찰은 반성과 쇄신보다는 조직의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기억에 남는다”고 꼬집었다.

김태연 원내대표도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가 2일 개최되는데,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위 회부는 윤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

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윤 총장의 이런 상황은 검찰을 통치기관으로 착각한 특권의식에서 비롯됐다”며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 윤 총장의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했던 이낙연 대표를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대표께서 국정

조사를 제안했다”며 “남아일인 중천금”이라고 표현했다. 또 지난달 27일 제출한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한 수용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행위가 충격적”이라며 “당에서 국정조사를 검토해 달라”고 말한 바 있지만, 당내 우려가 커지자 한발 뒤로 물러난 상황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윤 총장을 꼭 내쳐야 한다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

한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며 나흘째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문 대통령의 대답을 요구했다. 안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은 나라가 돌이킬 수 없는 혼란과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며 “그 중심에는 유리할 때만 나서고 불리할 땐 숨는 대통령, 권력을 키우며 사익 추구에 혈안이 된 홍위병 측근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치와 민주주의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다면 대통령은 민주당과 추 장관 뒤에 숨지 말고 국정 책임자로서 정당 대표들과 진정성 있게 서로 의견을 나누자”고 제안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2021년도 광업자원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시행되는 2021년도 광업자원분야(광해, 채광)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검정종목 및 시행일정

종 목 명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접수)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접수)	실기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기 술 사	자원관리	7.12~7.16	8.28	10.6	10.11~10.14	11.6	11.12
	광해방지	3.22~3.26	5.1	6.9	6.14~6.17	7.10	7.16
기 사	광해방지	5.31~6.4	7.3	8.4	8.9~8.12	9.11	10.20
	광산보안	2.1~2.5	3.13	4.7	4.12~4.15	5.10~5.30	6.23
산업기사	광산보안	2.1~2.5	3.13	4.7	4.12~4.15	5.10~5.30	6.23
	광산보안	2.22~2.26	4.3	5.6	5.10~5.13	6.10~6.30	7.7
기 능 사	시 추	7.5~7.9	8.21	9.8	9.13~9.16	9.25~10.31	11.5

■ 필기(실기 필답형 포함) 시험시간

등 급	시험시간	비 고
기 술 사	09:00 ~ 17:20	○ 입실시간 : 시험시작 30분 전 ○ 기사등급은 종목별 시험시간이 상이함
기 사	10:00(10:30) ~ 12:30	
산 업 기 사	14:00 ~ 16:30	
기 능 사	11:00 ~ 12:00	

■ 원서접수 안내사항

가. 수험원서는 공단 국가기술자격검정 홈페이지(<http://mq-net.or.kr>)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수험원서 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입니다.

나. 수험원서 접수 세부사항, 필기·실기시험 장소 및 시험시간 등 자세한 응시안내는 공단 국가기술자격검정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서류 제출안내

가.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는 당회 필기시험 합격발표일로부터 검정홈페이지에 공정한 기간 이내 소정의 응시자격서류(졸업증명서, 공단 양식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자체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자체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에 한 합니다.

나.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 입니다.

다. 응시자격 서류심사 종료 후 서류심사 불합격자(자격미달,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검정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형 시험 안내사항

가. 작업형 실기시험은 시험장 임차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일정, 수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평일에 시행될 수 있으며, 일부 종목은 지방에서 실시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험자 지참준비물은 수험표에 안내되어 있으니 출력·지참하고 응시바랍니다.

■ 기타 안내사항

가. 신분증 미 지참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입니다.

다. 접수된 응시자격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수수료 환불은 검정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각 시험별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 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바.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검정 관련 문의사항은 공단 자격검정실(033-902-6561~65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정 정보 안내

○ 한국광해관리공단 국가기술자격검정 홈페이지, <http://mq-net.or.kr>

2020년 12월 1일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자본시장은 놀이터...로비·작전·먹튀로 '탐욕' 채워

론스타 배후 '검은 머리 외국인' 의혹... '라임'에도 등장
조세 회피처, 유명회사 세우고 역외 투자방식 자금세탁

'론스타'는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 지연의 책임을 물어 5조 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국제소송(ISD)을 제기했다. 소송에 지면 국민의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 사건은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은 없다.' (영화 '블랙머니'의 엔딩 자막) 지난해 개봉한 영화 '블랙머니'는 2003~2011년 미국계 투자자본인 론스타(극중 스타펀드)의 외환은행(현 하나은행) 인수·매각 과정을 둘러싼 검찰·금융당국·금융권의 막후를 다루고 있다. 지금껏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고, '검은 머리 외국인'이 비극을 주도했다는 설이 무겁게 깔려 있다. 탐욕스러운 은행 고위층과 '모피아'라 부르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일부 경제 관료들이다.

2009년 개봉한 영화 '작전'. 전형적인 '검은 머리 외국인'이 등장한다. 펀드매니저인 브라이언 최는 미국에 만들어 놓은 펀드를 통해 외국인 명의로 주가조작 대상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다. 외국인도 투자하는 회사라고 소문을 내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주식 매입을 부추긴 뒤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챙기겠다는 게 그들의 작전이었다. 이처럼 한국인이지만 외국에 계좌를 두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한다. 케이맨제도나 비진아일랜드, 버뮤다 등 유명 조세회피처에 페이지퍼너를 만들거나 역외펀드를 조성해 국내에서 투자 활동을 하는 수법을 쓴다.

◇론스타의 유명 언제 사라질까 = 론스타 인수·매각 과정의 배후가 한국인이라는 '검은 머리 외국인' 의혹도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검찰 수사 결과 관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과 관련해 올해 9월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등 금융당국자들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전 경제부총리,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김석동 전 금융감독위원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은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바뀌치기를 진행하고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의 은행 인수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지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정치권은 침묵했다. 금융위원회의 로비력에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 론스타 사태 관련 인물 5명 모두 국정감사에서 볼 수 없었다. 전지에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검은 머리 외국인의 조력을 통한 또 다른 론스타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론스타 사건) 당시 로비했던 사람들이나 로비 대상이었던 사람들에게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있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ISD(투자자-국가 간 분쟁)는 8년째 진행 중이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9년 동안 4조 6000억 원을 벌고 2012년 한국을 떠나면서 그해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5조 6000억 원 규모의 국제분쟁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최근 소송을 중단하는 타협안으로 8억 7000만 달러(약 9700억 원)를 제시했다. 법무부는 30일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케이맨 '그림자 펀드' 여의도 증권가 어슬렁=대놓고 '검은 머리 외국인'임을 드러내놓고 자본시장을 놀이터 삼는 이들도



영화 '블랙머니'(왼쪽 사진)와 '작전' 스틸 컷. 두 영화는 국내시장에 나도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캐나다 국적)이 그런 부류다. '희대의 금융사기'로 불리는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규모는 1조 6000억 원에 달한다.

국내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1조 3000억 원 규모를 투자한 헤지펀드에 대해 환매 연기를 통보한 홍콩계 자산운용사 젠투파트너스도 '검은 머리 외국인'의 한 부류다. 증사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의 활동은 공

공연한 비밀이다. 바하마 등에 국적을 둔 이들은 국내 증시에 거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아 공공증을 더한다. 증권투자를 위해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는 8월 말 기준 4만 4318명을 넘는다. 이들 중 9269명(20.9%)은 조세 회피처에 국적을 갖고 있다.

이들이 선호하는 투자 채널은 크게 3가지다. 정보 공개가 까다로운 국가의 비밀계좌를 이용하거나 조세회피 지역에 페이지퍼너를 세우고 이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다. 일반 사모펀드를 구성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역외 헤지펀드에 베풀는 방

법도 있다. 만약 정부의 정책 입안 과정에 개입할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이라면, 사모펀드를 통해 신분을 숨기고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검은 머리 외국인은 세금 탈루 외에 기업들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준다"며 "거래제한과 세금 문제 등 경영실적의 투명한 공개 의무를 저버리고 대주주가 안아야 하는 책임을 피하려는 방법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우람 기자 hura@etoday.co.kr

오예린 기자 yerin2837@

과실만 챙기는 재벌家 외국인

주요 주주로 거액 배당금 수익
병역면제 물론 세금 안 내기도

스웨덴 발렌베리(Wallenberg) 가문. 잘 알려졌다시피 발렌베리 가문은 한국의 재벌과 비슷하다. 인베스터라는 지주회사를 통해 SEB, 일렉트로룩스, 에릭슨, 사브, ABB 등 스웨덴의 주요 기업을 거느리며 100여 개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다. 현재 5대째 후계자가 그룹을 경영하는데도 스웨덴 국민은 여전히 발렌베리 가문을 존경한다.

비결은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과 높은 공익 의식에 있다. 발렌베리 가문은 1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철저한 검증과 경쟁을 통해 후계자 2명을 선정하고, 두 사람이 균형과 견제를 이뤄가며 그룹을 경영하도록 한다. 또 이익금의 85%를 법인세로 납부해 사회에 환원한다.

한국판 발렌베리는 흔치 않다. 우울한 배경에는 '재벌 총수 자본주의'이자 '세습 자본주의'가 자리한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재벌은 왕조처럼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승계 문제와 함께 심심찮게 논란이 되는 게 '국적' 문제다. 적잖은 2, 3세 일가들이 세금 회피, 병역 기피 등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 2014년 통계지만 국내 10대 재벌 일가 921명 가운데 미국 국적자는 95명으로

10%나 됐다. 46명은 각 기업 주요 주주로 해마다 엄청난 배당금을 챙겼다. 또한 1980년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재벌가 남성 35명 가운데 23명이 외국 국적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미경 CJ 부회장,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아들 이규호 상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이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이지만, 해당 기업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려 매년 거액의 배당금을 챙기고 있다.

국적이 외국이다 보니 병역 면제는 물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도 있다.

LG그룹 방계 레드캡투어 대주주인 구본호 씨는 과거 조세심판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오히려 논란이 됐다. 미국 국적자로서 주식양도세 20억 원을 내지 못하겠다고 소송을 낸 것인데, 증권가에서는 '검은 머리 외국인'의 국부 유출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구 씨는 LG 구인회 창업주의 동생인 구정희 창업고문의 손자다.

증권사 내 가업 승계 업무 관계자는 "기업 규모를 넓혀 중견·중소기업으로 살피면 자녀들의 해외 국적 비율이 매우 높다"며 "유학, 병역 등의 문제에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이들은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병역을 이행하진 않으며 상속, 증여에도 큰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인아 기자 ljh@

매일 하는 체지방 관리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골드

현대인의 문제적인 식습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리미엄 녹차 정제



고열량, 고탄수화물, 고당류 식이 섭취로부터 체지방, 콜레스테롤 개선
메타그린 골드의 녹차추출물이 고열량, 고탄수화물 식단이 잦은 한국인의 체지방 관리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을 도와 대사 건강을 케어합니다



현대인의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으로부터 항산화, 뼈 건강 관리
비타민C, 녹차추출물이 함유되어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생성되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며, 비타민D가 함유되어 뼈 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메타그린 골드만의 프리미엄 정제 기술 적용
아모레퍼시픽만의 녹차 정제 기술을 높여, 정제를 만들고 코팅하는데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9가지(아산화티타늄,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아산화소)를 함유하지 않았으며, 장용성 코팅 기술로 더욱 속 편하고 부드럽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 국내 농산물 유래 건강기능식품 중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 **녹색기술제품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100% 유기농
국산 녹차
오실텍 농장 직접 재배 관리



제품상단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바이탈뷰티

사상 초유 ‘칸막이 수능’ 적응시간 고려 조기 입실을

수능 직전 컨디션 관리 및 학습법

- ① 야식과 몸보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 ② 평소 아침을 먹지 않았다면 수능일에 꼭 챙겨먹지 않아도 된다.
- ③ 약물은 먹던 게 아니라면 유익해 복용해야 한다.
- ④ 모두가 불안한 한 해였다. 비관적 생각을 버려라.
- ⑤ 수능 당일 20~30분 일찍 고사장에 가서 칸막이에 적응하라.
- ⑥ ‘코로나19’ 관련 지문에 대비하라.
- ⑦ 역대 최고치로 예상되는 결시율도 변수.
- ⑧ 안 풀리는 문제 과감히 넘길 것. EBS·모의고사 점검 필수.

평소처럼 먹고 쉬는시간 스트레칭
전날밤 야식보다 과일·데운 우유
‘비대면’ ‘원격수업’ 출제 가능성 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상 처음 12월에 치러진다. 수험생들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수시로 바뀐 입시 일정과 평소와 다른 수업 분위기에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많다.

수능을 이틀 앞둔 지금부터는 컨디션 조절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느냐에 따라 긴장감을 덜어내고 맑은 정신으로 차분하게 시험을 볼 수 있다. 이투데이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식습관 관리부터 심리 안정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봤다.

◇불면 유발하는 야식은 금물 = 늦게까지 공부하는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는 아이에게 무엇이든 챙겨 먹이고 싶은 마음에 야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은 자제해야 한다.

정석훈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계속되는 야식은 불면을 유발할 수 있고,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 기능성 위장 장애 등 소화기 질환을 악화시켜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며 “잠을 수 없을 만큼 허기지다면 약간의 과일이나 따뜻한



30일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서 2021학년도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의 전국 시험 지구별 배부를 위해 관계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우유로 가볍게 달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식습관도 평소처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대개 ‘아침 식사는 꼭 챙겨 먹어야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반건호 경희의료원 소아정신과 교수는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 게 몸에 맞지 않으면 수능 직전 수험생들에게는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 교수는 “그간 ‘바이올리듬’에 맞춰 식습관을 이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며 “역지로 부모들이 수능 때 아침밥을 먹이려 하는데 안 먹다가 갑자기 아침밥을 먹게 되면 수능 때 급제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긴 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능은 수험생에게 집중력과 싸움이다. 반 교수는 “쉬는 시간마다 집과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맨손체조와 같은 가벼운 스트레칭은 단기적으로 피로를 풀어주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어깨와 목, 머리 부분에 좋은 스트레칭 방법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점진적 근육이완법 등을 따라 해보면서 쉬는 시간을 보내면 유익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책상 앞 칸막이 익숙해져라 = 입시전 문가들은 가능하면 이번 수능에 처음 도입되는 책상 칸막이를 직접 체험해 보라고 조언한다. 긴 지문을 읽기 위해 시험지를 수시로 넘기는 경우가 많은 국어와 영어 영역에서 큰 결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수능 당일 20~30분 일찍 시험실로 가서 칸막이에 적응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수능 시험 당일은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고사장에 일찍 가서 칸막이에 익숙해져 칸막이에 적응하는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것”이라며 “본인이 직접(칸막이를) 만져봐야 알지 얘기만 들어서는 불안감만 가중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사장에 일찍 도착해 수능 환경에 신체 리듬을 맞춰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수능 지문 소재 ‘코로나19’ 관련 대비 = 올해 수능에서는 비대면, ‘원격수업’, ‘재택근무’ 등 코로나19 관련 지문(地文)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비

문학 영역에서 긴 지문 하나가 주어지고 2~3문제가 나란히 연결되는 연계 문제 형태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자연계열에서는 과학 지문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등의 제시문도 주어질 개연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안 풀리는 문제 과감히 넘겨야” = 수능까지 남은 시간 모의평가, 문제집 등에서 틀렸던 문제에 대한 최종 점검이 중요하다. 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한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다시 점검하는 것은 필수다. 해당 모의평가는 올해 수능 출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이기 때문이다.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주제와 유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로운 도표, 그래프, 제시문 등이 포함된 신유형 문제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능 연계 EBS 교재를 다시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며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도 되도록 많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풀리지 않는 문제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건너뛰는 습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확진·격리 수험생 신고 후 별도 응시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험생이 시험 당일 신경 써야 할 사항이 몇 가지 더 생겼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까지 마무리 학습에 더해 고사장 내 방역 수칙까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3일 치러지는 올해 수능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수험생과는 다른 장소에서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격리통보를 받았을 때 교육청에 이를 신고한 후 시험장을 재배정받아야 한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수능 전날인 2일 보건소 근무를 밤 10시까지 연장기로 했다. 수능을 앞두고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우선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수험생의 경우 진단검사 결과를 당일 통보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육청에 검사결과를 신고할 때 격리 수험생의 경우 수능 당일 자차 이동 여부도 같이 알려야 한다. 교육청은 자차 이동이 불가능한 수험생 수를 취합해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청에 전달하고, 지자체는 방역차량이나 구급차로 격리 수험생의 이동을 지원한다.

확진 수험생은 곧바로 지정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해 시험을 보게 된다. 만약 확진·격리 수험생이 지정된 별도 시험장소가 아닌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수험생은 수능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다.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입실 전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한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분실·오염·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 오는 걸 권장한다. 망사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등 비말 차단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제품을 착용해선 안 된다. 손현경 기자 son89@

당신의 능력개발 레시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담어드려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대표 인적자원전문기관으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를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탄력근로제〉

정부 ‘탄근제’ 내놔지만… 노동계 반발에 힘로 예고

보완 입법 연내 처리되나

정부가 30일 올해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주 52시간제 취지가 후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없이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키로 한 이유로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준비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됐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내세웠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실시한 50~299인 기업 대상 전수조사 결과 80% 이상의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다. 90% 이상은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주 52시간제 시행 직전이었던 작년 11월 조사에서 '준수 중'인 기업이 57.7%, 작년 연말까지 '준비 가능'하다는 기업은 83.3%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8.9%)에 대해서는 교

고용부 “中企 80% 이미 준수 중”
정부 “지원텐 즉각시행 무리없어”

민주, 탄력근로제 국회처리 총력
노동계 “52시간제 무력화” 우려

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최우선 제공과 인력 알선, 재정지원 등에 나서면 무리 없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주 52시간제 전격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앞서 2018년 7월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300인 이상 사업장에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50~299인 사업장을 합치면 총 1년 9개월의 준비기간을 준 것이다

만약 50~299인 사업장의 계도기간을 또 연장하면 문재인 정부가 후진국형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워라밸(일·생활 균형)' 사회로 가기 위해 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 연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입한 주 52시간제에 대한 정부의 법 집행 의지 자체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내년 7월 5~4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실질 적용도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계도기간 연장 대신 주 52시간제를 보완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최장 3개월→최장 6개월) 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

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범위를 놓고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6개월, 1년을 주장하며 의견을 달리했지만, 현재 6개월로 일부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한정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각각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300명 미만 중소기업의 근로시간의 탄력적 연장이 가능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 사태 등을 놓고 여당에 반발하고 있는 야당이 해당 법안 처리에 동조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여당이 의석 과반수를 앞세워 이달 중 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대로 탄력근로제 개선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미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 52시간제 의예의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범위를 확대한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까지 연장되면 주 52시간제가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기업 “인건비·경영 악화” 반발

“中企 10곳 중 4곳 준비 안됐는데… 대안 없는 강행, 영세업체 직격탄”

“규제는 일사천리…이울배반”

정부의 50~299인 중소기업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계도기간의 연말 종료 방침에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 '탄력 근로제' 등 국회 보완 입법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강행하고 있어서다.

3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한 보완 입법 중 하나로 거론되는 탄력 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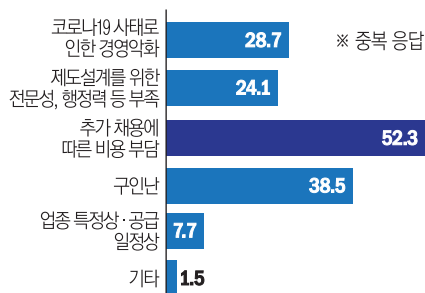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앞서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했다. 지난해 2월 경사노위는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안을 내놔다. 하지만 이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올해 중소기업 차원에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이라며 “현장에서는 코로나19와 경영 악화로 씨름하고 있는데, 탄력 근로제 등의 보완 입법도 갖추지 않은 채 주 52시간제를 강행하는 것은 영세한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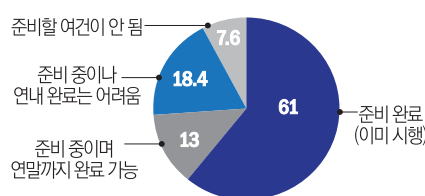
중소기업계는 이미 사회적 대타협을 본 경사노위 결정도 지키지 못하면서 경영계를 짓누르는 규제는 광범위하게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울 배반'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집단소송법과 초과유보소득 과세를 명시한 세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법) 등에서 과잉 입법 논란이 일고 있지만, 오히려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회원사 500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아직 주 52시간제 준비를 못 했다'는 응답이 39%

주52시간 준비 못한 이유 (단위: %)



주52시간 준비 상태 (단위: %)



현장으로 보완을 위한 개선 필요 제도 (단위: %, 중복 응답)

월간·일간 연장근로의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기업이 알아서 활용	30.4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정산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22.6
8시간 추가연장 근로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기한 없이 확대	53.4
특별연장근로제도의 인가 요건 완화	33

나 됐다. 업체들이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가장 컸다.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처리되지 않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 본부장은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대로 탄력·선택 근로제 등이 갖춰진 상황에서 주 52시간제를 시행해도 늦지 않은 만큼 국회가 올해 회기 안에 보완 입법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본부장은 “정부 역시 보완 입법 통과 여부를 보면서 계도기간 연장 및 인력난 해소 등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중소기업들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주 52시간 단축과 공휴일의 유급 휴일화 조치가 동시에 적용됨에 따라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인력난이라는 이중고로 더욱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재훈 기자 yes@



국민, 좋아요 ♥
보험, 좋아요 ♥

KB손해보험 | KB생명보험
LOVE YOURSELF 프로젝트

바쁜 일상 때문에
정작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이
[나를 위한 LOVE YOURSELF 프로젝트]로
빠짐없이 챙겨드릴게요!
꼭 필요한 보장만 모아 빈틈없이 통합관리해주는 보험

보험은 역시 KB입니다

KB 손해보험	KB 생명보험			
아이의 미래, 더 밝아질 수 있도록 KB 자녀보험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KB 건강보험	소중한 내차, 더 안전할 수 있도록 KB 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를 쉽고 빠르게 KB 간편청구서비스	나와 내 가족, 더 안심할 수 있도록 KB 종신보험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본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기일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장사고 외에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요구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한 경우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한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한 경우 *보험계약 전, 자세한 상품내용과 제언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의 심의필 제18649호(2019.07.08) *주식·증권·채권·부동산·타인권 등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 *고객콜센터:1544-0114 *생명보험협의 심의필 제2019-02195호 (2019-07-09) *주식·증권·채권·부동산·타인권 등 28 KB 금융타워 www.kbfi.co.kr *고객콜센터:1588-9922

KB손해보험 | KB생명보험

제조업 종사자 1년새 7.9만명 감소 ‘코로나 직격탄’

고용부 ‘10월 사업체 노동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난달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종사자 감소폭이 역대 최대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10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으로 제조업의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366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7만9000명(2.1%) 줄었다.

10월 감소폭은 사업체 노동력 조사 고용 부문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6월 이후 최대 규모다. 제조업 종사자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올해 2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6월부터는 7만 명대 감소폭을 이

통계 작성 11년 만에 최대 규모

경기침체 따른 생산·수출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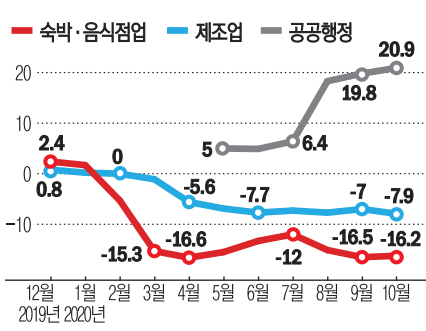
음식·숙박업은 16만명 줄어

“신산업 진출, 노동구조 개선을”

어가고 있다. 이 같은 제조업 고용 약화는 코로나19발(發) 국내의 경기침체에 따른 생산·수출 부진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숙박·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도 코로나19발 고용충격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0월 숙박·음식업 종사자 수(112만5000명)는 전년보다 16만2000명 줄면서 9월(16만5000명)에 이어 16만 명 넘게 감소했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주요 산업별 사업체 종사자 수 추이
(단위: 만 명, 전년 동월 대비) ※ 출처: 고용노동부



임대서비스업(-6만4000명), 도매 및 소매업(-5만6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3만8000명), 교육서비스업(-3만 명) 등도 종사자 수가 크게 줄었다.

문제는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3차 유행

이 나타나면서 숙박·음식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의 고용충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동안 100명대를 유지해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300명대로 늘어났고, 현재 400~500명대를 기록 중에 있다. 이에 정부는 전날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하면서 사우나와 단체운동, 음악교습 등 위험한 시설 및 활동에 대한 핀셋 조치를 도입하는, 이른바 ‘2+α’ 조치를 시작하고,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일제히 1.5단계로 상향했다. 이처럼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거리두기가 보다 강화되면서 자영업자와 기업의 타격이 심화되고, 그 여파로 고용 감소 및 실적 사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조업 고용 약화는 수출 부진에서 비롯되고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수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가격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높은 노동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비용의 영향을 덜 받는 신산업 진출을 위한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로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일단 노사가 인건비 조정 등에 협력해 고용 유지에 적극 나서서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세종=서병문 기자 sbg1219@



정부가 12월 1일부터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린다.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사우나 및 한증막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는 ‘2+α’ 조치를 시행한다. 30일 서울 종로구 한 한증막 업소에서 관계자가 발한실 운영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뉴시스

정은경 “젊은 확진자 증가세… 하루 1000명 넘을 수도”

“사람 간 접촉 줄이기 절실… 방역 철저·조기검사 받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했다. 방역 당국은 젊은 확진자가 증가 추세여서 하루 확진자가 최대 1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30일 브리핑에서 “확진자 1명의 감염력을 의미하는 감염 재생산지수는 1.43으로 여전히 높다”며 “단순계산을 해 보면 많게는 700~1000명까지도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재생산지수가 높아진 배경은 외부활동이 활발한 ‘젊은 확진자’의 증가다. 정 본부장은 “50대 이하 환자가 9월에는 58.9%였지만 현재 11월에는 74.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나흘간 500명을 웃돌

던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로 줄었지만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438명 증가한 3만420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생은 414명, 해외유입은 24명이다. 수도권(261명)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영남권(82명)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했다.

정 본부장은 “마스크,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조기 검사를 통해 노출을 줄이는 세 가지의 노력이 합쳐져야 재생산지수를 1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30일 12시(정오) 기준 감염경로별 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과 관련해 13명이 추가 확진(누적 189명)됐으며,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와 관련해선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누적 89명)됐다. 인천 연수구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도 53명으로 3명 늘었다.

비수도권은 충북 제천시 김장모임과 관련해 확진자 15명이 추가(누적 55명)됐다. 해당 사례는 음식점, 학교, 좌담회 등으로 추가 전파됐다. 지역별로는 충북(34명), 강원(14명), 인천(5명), 대전(2명) 등으로 번졌다. 경북 경산시와 부산 연제구에선 음악대학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각각 24명, 15명의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며, 부산·울산 장구 감숙과 관련해선 확진자가 42명 추가(누적 148명)됐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배출가스 5등급 車, 내년 3월까지 수도권 운행 금지

12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정부는 석탄발전 가동 감축 등 2차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최대 6일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1일부터 4개월간 시행될 예정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국민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시행되는 계절관리제를 통해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제한 시간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차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3일 하루는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해 단속하지 않고, 서울의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올해 말(저소득층 차량은 전체 제외)까지 단속에서 제외한다.

과태료를 부과한 후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할 경우 과태료는 환불 또는 취소해 준다.

아울러 324개 사업장은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들어가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최대 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이 정지한다.

환경부는 부문별 대책의 시행으로 2016년 4개월간 배출량 대비 초미세먼지(PM2.5) 직접 배출량을 6729톤(20.1%)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코로나 블루’ 극단적 선택 막는다

학교 찾아가 심리상담 실시

2030 여성에겐 일자리 지원

정부가 ‘코로나 우울’에 대응해 자살예방 상담전화 등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또 청년과 20·30대 여성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찾아가는 정신건강 컨설팅’을 실시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인턴제도를 확대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자살예방정책 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자살예방 강화대책’과 ‘코로나19 대응 학생 및 20·30대 여성 자살예방 대책’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자살 사망자(추정치)는 975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18명(5.0%) 감소했으나, 시도자수는 0.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도 지난해 8월 6468건에서 올해 3월 1만4351건, 8월 1만7012건으로 급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고립감 지속과 전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난 등이 배경으로 분석된다.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20℃ 지켜요”

산업부·에너지공단 캠페인… GS리테일·홈플러스 등 동참

산업통상자원부와한국에너지공단은 시민단체와 함께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석 달간 겨울철 ‘20℃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 캠페인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그간 추진해온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개편해 피부와 옷을 실전 방안을 제시, 국민 참여를 보다 확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에너지절약 자체보다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강조해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겨울철 건강과 쾌적한 실내환경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이 특징이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표한 ‘겨울철 한파 대비 건강 수칙’ 가운데 적정 실내온도를 18~20℃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국민 참여형 이벤트를 여는 등 다양한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20℃ 적정 실내온도 상점을 찾아 소비·구매 활동 후 인증샷 참여 이벤트 △가정에서 20℃ 설정 및 고효율제품 사용 인증샷 참여 이벤트 △20℃ 설정된 실내에서 내복

입기 실천 영상 릴레이 이벤트 등이다.

이번 캠페인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GS리테일, 홈플러스, BGF리테일, CJ CGV 등 유통, 화장품, 문화 분야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이다.

△GS리테일 1만4400여 개, BGF리테일 1만5000여 개, 홈플러스 480여 개, CJ CGV 180여 개 등 참여 프랜차이즈 업체의 전국 모든 매장은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

이와 함께 이들 기업의 전국 매장에서는 디지털 전광판 등 광고 플랫폼을 활용해 적정 실내 온도 지키기와 에너지 절약 실천, 기후 변화 대응 중요성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산업부는 KT, LG U+, 올리브영, 롯데쇼핑 등과도 협업을 논의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 캠페인을 지속해서 확산하겠다”며 “적정 실내온도를 지키는 것은 에너지 절약 실천을 넘어 코로나 시대 건강 유지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SK하이닉스의 첨단 반도체가
언택트 시대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생활이 멈추지 않도록
늘 함께하는 첨단 기술이 있습니다

與 “8.5조” vs 野 “11.6조”… 예산 증액 협상 줄다리기

민주 “주거안정·탄소중립까지… 국채 발행해 순증해야”
국민의힘 “학교 돌봄사업 포함… 뉴딜 예산 삭감해 조달”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달 2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내년도 본예산에 최소 2조 원을 순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 시간인 30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 및 백신 예산 등을 논의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안 순증 규모와 관련 “아직 확정할 수 없지만 2조 원은 최소한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555조8000억 원 규모다. 당정은 여기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 뚝으로 약 5조 원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산은 1조 3000억 원이 논의된다. 전 국민의 85%인 최대 4400만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금액이다. 정부는 전국민의 60%인 3000만 명분 백신 확보를 추진해 왔는데, 목표치를 더 늘린 것이다.

이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해 증액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지만, 정부가 제시한 감액 규모로는 메우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민주당은 추가 국채 발행으로 예산 규모를 순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한 국판 뉴딜 예산을 깎아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달 24일부터 간사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가 약 5조 원을 감액하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민주당은 주거안정 및 탄소중립까지 총 8조5000억 원, 국민의힘은 학교 돌봄사업까지 11조6000억 원의 증액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2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정치권의 요구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셈이다.

국회법상 예결위의 활동 시한은 이달 2일까지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예산안은 이튿날 자동으로 정부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후에는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대이בל로 넘겨져 최종 담판이 진행된다. 최종 결론을 반영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2일 이른 아침까지는 여야가 결론을 내야 한다.

민주당은 기한 내 예산안 처리 의지를 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제54조 2항에 따라 12월 2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野 빠진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의 전 “야당 법사위 간사 교제 요구와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 폭언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과 없고 일정과 안건을 마음대로 정해 통보해 왔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차기 대권주자 2위로

이낙연과 0.8%p 差… 서울·보수·중도 지지율 상승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2위로 올라섰다. 주목할 점은 서울과 보수·중도층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리얼미터는 30일 2020년 11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0.8%포인트(P) 뒤처진 19.8%로 2위를 차지했다. 지난 10월 조사보다 2.6%p 상승한 결과다. 가까스로 1위를 지킨 이 대표는 20.6%를 기록했다. 7개월째 하락세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위로 밀려났다. 10월보다 2.1% 하락했다.

윤 총장이 2위로 올라설 수 있었던 원인은 서울과 보수·중도층의 지지가 높아진 탓으로 보인다. 윤 총장 지지율은 서울에서 3.9%p, 보수층에서

3.5%p, 중도층에서 2.9%p 상승했다. 이 대표는 서울에서 8.3%p 하락해 17.9%를 기록하며 10%대로 내려섰다. 이 지사는 보수층에서 4.4%p 하락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5.1%로 전월 대비 0.4%p 올라 4위를 기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위에서 5위로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달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8명을 대상으로 벌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상 기자 jooon@

민주,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국민의힘, 표결 불참 “5공 회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담긴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차에 걸쳐 심의·의결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되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를 삭제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공수사권 이관의 경우 수사권의 원만한 이관과 안보 공백 방치를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그동안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개악’이라며 반대해왔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끝까지 독소조항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다”면서 “경찰에서 국내정보와 수사가 결합될 경우 5공 시대 치안본부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태웅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사찰기능을 오히려 강화시킨 대표적인 개악법안 그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국정원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면서 “수년간 해왔던 국정원 제도개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외의 개정안 내용은 여야 이견이 없다. 우선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특정사안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경우 정보위에 보고토록 했다.

특정 정당, 정치단체 등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이용 행위를 금지하는 ‘정치개입 금지 유형’을 확대했으며,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이윤리 국정원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국정원 직원의 불법 감정 및 위치추적 등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처벌 근거도 신설했다.

민주당은 이날 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늘색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초미세먼지 나쁨
1년 70일 이상

아동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문제에 가장 취약

아이들이 파란 하늘 아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앞장섭니다.
함께 해주세요!

‘對中 압박’ 손잡자… 냉랭하던 EU, 美에 러브콜

FT, EU 협력 계획 초안 입수
‘포스트 트럼프’ 관계회복 노력
코로나 대응·디지털 규제 탈피
中 성장전제 정책 제안 등 포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유럽연합(EU)과 미국 사이에 달콤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양측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집권기 내내 찬바람이 불었지만, 바이든 시대를 맞아 관계를 회복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선명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및 삼립 훼손 규제 등에 대한 미국과 EU 간 공조 내용을 담은 EU 측의 계획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세계적 변화를 위한 EU-미국의 새로운 어젠다’라는 제목의 초안은 11페이지로 구성됐으며, 무역 충돌, 과세와 같이 긴장을 유발하는 문제에서 벗어나 양측이 화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디지털 규제 환경의 탈피를 강조했다. 반독점 행위와 데이터 보호에 있어 공동된 접근법을 적용하고, 사이버 해킹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해결점을 찾자는 것이다. 민감한 사안이 가미된 외국 기업의 투자를 심사할 경우 이 역시 함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국가 간 협력을 넘어 세계보건기구(WHO)의 개혁을 촉구했다. 이미 미국은 WHO 탈퇴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7월 EU 순회 의장국인 독일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독립위원회 신설을 WHO에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초안은 또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EU와의 협의를 꺼렸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국과 EU 모두에 대해 일방적 무역 조치를 선택하면서 EU 역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초안에 따르면 개방형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질서를 토대로, EU와 미국은 향후 성장성에 기반한 중

국의 전략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합의한다. 우리는 복합적인 영향력을 통해 동질감 있는 민주주의의 중추적 역할을 해내야 한다.

FT는 EU가 제시한 초안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제안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전 세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 간의 회의를 내년 개최한다는 구상을 그리고 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 모임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이들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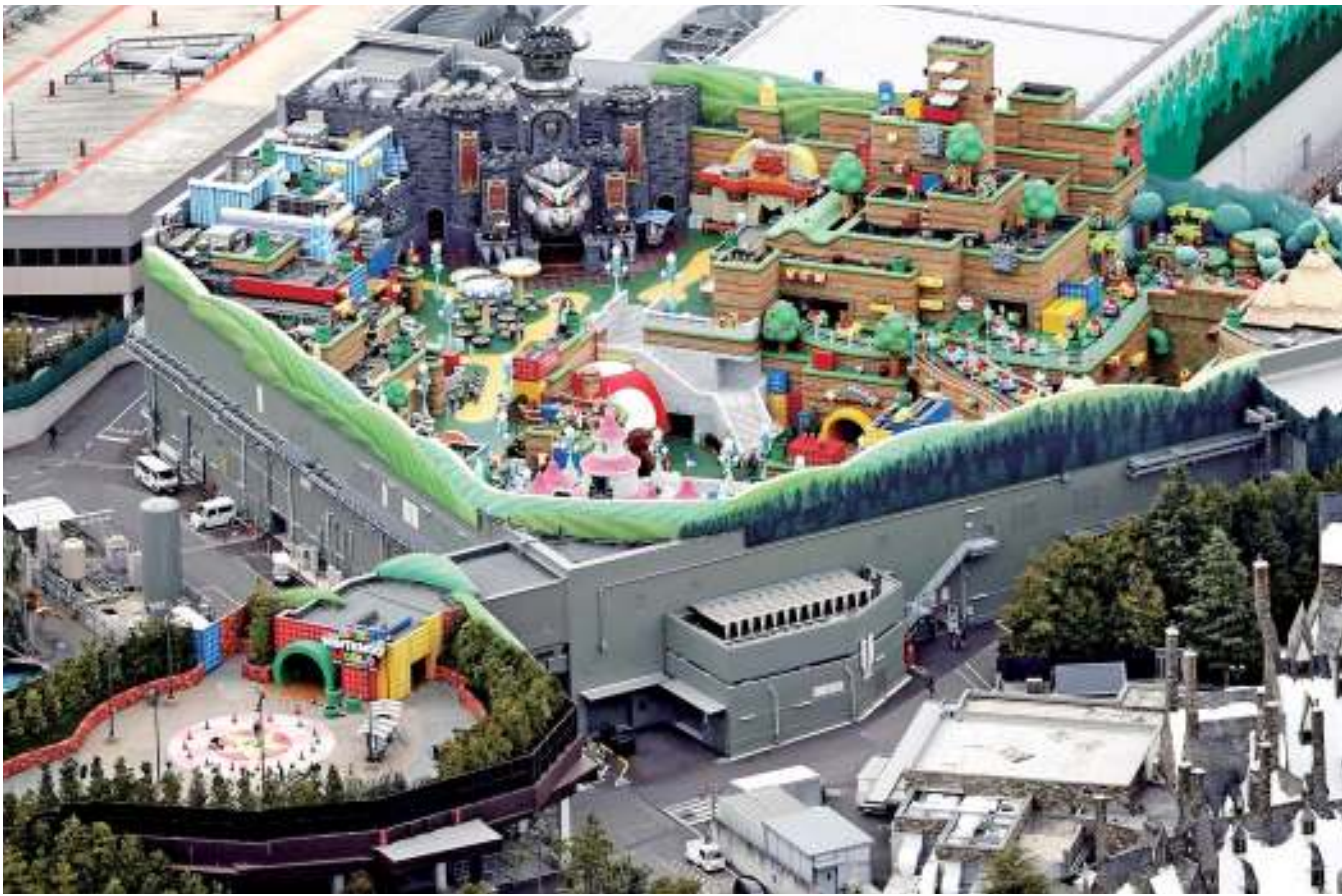
미국-EU 협력 초안은 EU 역내에서 벌어지는 유럽 국가 간 의견 불일치로 인한 미국과의 충돌도 경고했다. 최근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넓히면서 중국과의 전면전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EU 내에서 번지고 있을뿐더러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점이 EU 내 통합을 방해하고 있다. 중국이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결성한 ‘17+1’ 협력 그룹에 포함된 EU 회원국만 12곳에 달하는 점도 EU와 미국 간 협력의 장애물로 평가되고 있다.

EU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거대 중국 자본의 시장 침투와 5G 기술을 중심으로 한 중국 산업의 성장을 경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초안은 유럽위원회와 EU의 외교 정책 담당 대표들이 공동으로 제작했으며, 내달 10~11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제출돼 각국 정상들의 승인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전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대서양 양안의 공조 회복을 대외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으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간 트럼프 정부는 관세 부과나 수출 규제 등 ‘나홀로 조치’를 취했지만, 바이든 대통령 시대는 혼자 싸우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며 “이번 협력 계획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서양 양안 동맹을 다지려는 초석”이라고 말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내년엔, 꼭 만나요” 일본 오사카에 있는 테마파크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USJ)’이 아쉽게 준비한 새 어트랙션 ‘슈퍼 닌텐도 월드’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USJ는 30일 슈퍼 닌텐도 월드 개관을 내년 2월 4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 어트랙션은 닌텐도의 인기 게임 캐릭터들을 주제로 한 곳으로, 원래 올여름 개관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문을 못 열고 있다. 오사카/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최대 파운드리〉

끝까지 中 때린 트럼프… SMIC 블랙리스트 추진

美 국방부, CNOOC 등 4개사 거래금지 명단에 올릴 듯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제재가 계속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관련 문건과 3명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 국방부가 중국 군이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다는 간주되는 중국 국유기업들을 무더기로 블랙 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리스트에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와 중국해양석유(CNOOC), 중국건축공정총공사, 중국국제공정자문유한공사 등 4곳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미국의 블랙 리스트에 오르는 중국 기업은 총 35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블랙 리스트에 오르면 앞으로 미국인

이나 미국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며, 거래 또한 금지된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새로 추가되는 명단이 미국 연방 관보에 언제 게재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정권 교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뤄지는 것으로, 이를 계기로 미·중 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 치러진 대선에서 패배했음에도 중국에 대한 강경 조치를 멈추지 않고 있다. 얼마 전에는 군과의 연관성을 이유로 항공우주 분야 등에서 89개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 제품과 기술 구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

다.

로이터통신은 임기가 불과 수주밖에 남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인 것은 대중 강경 노선을 굳히고, 이를 차기 바이든 정권에서도 유지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러한 움직임이 차기 행정부와 중국의 긴장 완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겠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이 향후 협상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MIC는 관련 보도에 대해 “미국 정부와 건설적이고 개방적인 관계를 지속할 것”이라며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는 개인 및 상업적 용도로만 제공된다. 중국 군과는 관계도 없고, 군용으로 제조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대만 글로벌웨이퍼스, 獨실트로닉 인수 협상

글로벌 반도체 업계 쏟아지는 빅딜

올해 글로벌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반도체 업계의 빅딜 소식이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다. 10월 말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메모리 부문을 인수한 데 이어 대만 글로벌웨이퍼스가 독일 실트로닉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글로벌웨이퍼스는 지난달 27일 종가에 10%의 프리미엄을 얹어 주당 125유로(약 16만 원)에 실트로닉을 인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총 인수는 37억5000만 유로(약 5조 원)로 반도체 업계 M&A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게 된다. 실트로닉 지분 30.8%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 바커케미도 이 조건이면 매각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트로닉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합병으로 웨이퍼 업계 1위로 도약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24년 말까지 독일 내 일자리 감소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둔 실트로닉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내비게이션 등에 사용되는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해 13억 유로의 매출과 3억 유로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글로벌웨이퍼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580억 대만달러(약 2조2452억 원)

와 180억 대만달러였다. 이번 인수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12월 둘째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M&A 소식은 애플 등 이들 반도체 기업의 고객사들이 반도체 칩을 자체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업계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이달 초 애플은 자체 개발한 반도체 칩 ‘M1’을 탑재한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등을 공개했다. 시장에선 애플이 인텔 의존도를 낮추게 됐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여파도 반도체 시장의 M&A 가속화에 한몫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국 화웨이 테크놀로지와 SMIC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중국 기업을 고객사로 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에 애를 먹기 시작했고, 설비 투자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반도체 생산을 포기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아날로그디바이스는 맥심인티그레이티드프로덕츠를 200억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했고, 9월엔 엔비디아가 소프트뱅크 산하 영국 반도체 설계 업체인 ARM홀딩스를 400억 달러에 인수했다. 10월엔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부문을 9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롯데 꺾인 명품업계, 전자상거래 틈나

까르띠에도 구찌도 온라인 유통업체에 베풀

글로벌 명품업계가 그동안 터부시하던 전자상거래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비 추세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전환하자 생존 모색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오프라인 매장이 직격탄을 맞은 반면 온라인 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하고 있다.

명품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컨설팅 회사 베인앤컴퍼니가 분석한 결과, 올해 명품 매출은 작년 대비 23% 감소해 업계 매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올해 온라인 명품 매출 규모는 지난해 390억 달러(약 43조 원)에서 580억 달러로 늘어났다. 명품 소비 시장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12%에서 23%로

두 배 가량 뛰었다.

이에 롯데 높던 명품 브랜드들은 전자상거래 투자를 늘리며 태세 전환에 나섰다. 까르띠에, 반클리프앤애틀 등의 명품 브랜드를 거느린 스위스 리치몬트그룹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와 손잡고 글로벌 온라인 명품 패션몰 ‘파페치’에 1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구찌, 생로랑, 알렉산더맥퀸 등을 가진 케링그룹도 파페치 지분을 5000만 달러까지 늘렸다.

파페치는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매장을 모두 운영하는 거대 명품 유통업체로 3분기(7~9월) 매출이 7억98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62% 성장했다.

사실 명품업계가 이제서야 온라인에 뛰어들어 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명품업계는 아마존닷컴 같은 전자상거래 공룡들의 접근을 거부해왔다. 아마존의 ‘잡화점’ 이미지가 명품이 지닌 독특하고 차별적인 이미



스위스 취리히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매장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다. 취리히/로이터연합뉴스

지와 충돌한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명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글로벌 명품업계의 구미를 당긴 요인이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의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5% 급증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해외 여행 제한 조치로 중국 소비자들의 명품 소비가 폭발했다. 중국 명품 소비는 2025년 17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서영 기자 0jung2@

〈KB금융그룹 회장〉

윤종규 “뉴딜·혁신금융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 앞장”

KB뉴딜·혁신금융협의회

기술금융, 올해 목표보다 1.6兆↑
혁신금융 과제에 ‘뉴딜 지원’ 추가
2025년까지 총 76兆 투입 추진

윤종규(사진) KB금융그룹 회장은 “뉴딜·혁신금융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그룹의 핵심 전략방향인 ESG경영과 연계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 나가자”며 “동시에 그룹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고 역량을 결집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KB금융그룹은 지난달 27일 윤종규 회장을 비롯해 허인 KB국민은행행장 등 주요 계열사 경영진으로 구성된 ‘제3차 KB뉴딜·혁신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KB금융그룹은 7월부터 ‘KB혁신금융협의회’를 ‘KB뉴딜·혁신금융협의회’로 확대해 운영중이며, ‘KB뉴딜·혁신금융협의회’를 중심으로 2023년까지 66조 원의 ‘혁신금융’ 지원 및 2025년까지 10조원의 ‘한국판 뉴딜’ 지원 등 총 76조 원의 금융 지



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혁신금융’ 4대 agenda △혁신기업 여신지원 강화 △혁신성장 투자 확대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Start-up 육성 및 금융 연계플랫폼 혁신에 △한국판 뉴딜 지원을 추가했다.

KB금융의 ‘혁신금융’ 중 기술금융 지원 규모는 올해 순증 목표 6조8000억 원을 뛰어넘는 8조4000억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혁신기업 여신지원을 위한 동산담보대출 1228억 원, 혁신기업에 대한 1742억 원의

투자 등을 통해 연간 목표를 조기 달성하며 ‘혁신 금융’ 추진을 가속화 하고 있다.

또한, ‘혁신금융’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올해 6400건의 ‘창업지원 컨설팅’ 수행, 일자리 창출을 위한 ‘KB굿잡’ 취업박람회로 올해 3200여명의 취업 연결, 정책자금 플랫폼 ‘KB bridge’ 누적 이용인원 10만 7000명 등 직접적 금융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B금융의 ‘한국판 뉴딜’ 지원은 ‘한국판 뉴딜’ 사업의 10대 대표과제 중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등 8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들의 ‘한국판 뉴딜’ 사업 동참 및 수익 공유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 ‘KB 코리아뉴딜 펀드’, ‘KBStar 수소 경제테마 ETF’ 등 민간 공모형 펀드를 출시했으며 ‘KB생활인프라 펀드’ 2000억 원 및 ‘KB신재생 그린뉴딜 펀드’ 1300억 원 결성 등을 통해 본격적인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서지연 기자 sjy@

5대 시중은행 ATM 설치 현황 (단위: 대)

	2015년 말	2016년 말	2017년 말	2018년 말	2019년 말
KB국민은행	9078	8479	7988	7185	6777
신한은행	6815	6727	6076	5810	5773
우리은행	6893	6445	5901	5376	4808
하나은행	4873	4624	4205	4105	3983
NH농협은행	7024	6859	6617	6222	5832
합계	3만4683	3만3134	3만787	2만8698	2만7173

※ 출처: 금융감독원

“카드 만들어 본 적도 없어”

‘현금 없는 사회’ 준비 안 된 노년층

페이 등 디지털 금융 확산
ATM 3.4만개 → 2.7만개
“금융 서비스 개선 필요하지만
취약층 경제활동 제약 안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난달 30일 신한은행 서소문점 디지털택트(디지털과 콘택트의 합성어) 브랜드의 스크린에서는 고객이 들어 서자 이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이날 화상으로 연결된 직원은 화면을 통해 고객에게 금융 상담을 제공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4일 이처럼 화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혁신 점포 ‘디지털택트 브랜드’를 도입했다. 은행이지만 현금 거래는 주요 업무가 아니다. 예금과 적금, 청약의 상담과 대출 상담이 미래형 혁신 점포의 주된 업무다. 이 모든 과정은 태블릿에 서명하는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 지난해 국민은행도 일찍이 무현금, 무서류 기반의 디지털 창구 특화점인 KB디지털 금융점을 개점했다.

은행들이 이처럼 현금 없는 사회를 준비하는 건 한국은행의 발표와 맞닿아 있다. 2016년 한국은행은 올해까지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한국은행은 그 이유로 동전 관리 비용을 들었다. 한국은행의 계획에 더해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금융 거래가 잦아지면서 금융 업계는 현금 없는 거래에 집중하게 됐다.

최근 5년간 은행의 현금인출기(ATM)는 한 해 평균 1502대씩 없어졌다. 실제 금융감독원 통계정보시

스템에 따르면 2015년 말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ATM은 3만 4683개였으나 지난해 말엔 2만7173개로 줄었다. 현금 없는 사회와 디지털 결제 확산으로 은행들이 ATM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동시에 은행들은 현금 없이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이용해 결제하는 ‘○○페이’, 즉 간편 결제를 내놔다. KB국민은행의 리브페이, 신한은행의 쏘페이, 하나은행의 원큐페이, NH농협은행의 올원페이가 대표적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간편 결제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 “시장을 따라 잡기 위해, 시장을 잠식하는 기술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은행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가장 보편화 됐고 가장 강력한 파급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작 이런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건 기능을 사용하는 소비자이다. 특히 디지털에 생경한 노년층에게 현금 없는 사회란 상상하기 힘들다.

A(69)씨는 “은행이 읍내에 있어 거리가 있지만 통장에서 현금을 찾아 쓰고 있다”며 “카드도 만들어 본 적 없다”고 토로했다. B(79)씨 역시 “핸드폰으로 은행 일을 보는 건 누가 알려주지 않았다”며 “할 줄 몰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기관이 현금 없는 서비스가 가능토록 기능을 만드는 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현금이 아닌 방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활동을 제약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문수빈 기자 bean@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PC와 휴대폰에서도
간단한 접속만으로 재택근무부터 통합 경영관리까지 완벽하게
더존이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 정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할인’에 ‘정부지원’을 더하다! 단 40만원만 부담

비대면 업무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로 「홈피스 올인원 팩」
(‘Home + Office’ All in One Pack)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만나보세요(근태관리, CRM, PMS, 경비창구, 웹빌드, 도메인)

DOUZONE

dt.wehago.com

비대면 서비스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전용 상담 전화

02.6233.2000

롯데손보, 보험증권 친환경 인쇄물 전환

‘ESG 경영’ 강화 선언

롯데손해보험은 최근 소방관 보험서비스 출시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 데 이어 환경(E) 분야까지 아우르는 ‘ESG 경영’ 강화를 선언했다고 30일 밝혔다.

‘ESG 경영’은 재무성과 외에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으로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특히 환경(E)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고객에게 전달되는 약관·보

험증권·DM출력물 등 인쇄물과 임직원 및 고객용 다이어리 패키지 모두를 FSC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소재로 전환했다. 산림관리협의회(FSC) 인증은 산림 생물다양성 유지 등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친환경 종이에 부여된다.

또한 롯데손보는 신규투자 시 ESG가 우수한 지속가능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탄소 줄이는 자산운용을 위해 친환경 자산 운용 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신규투자 심사항목에 기업의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적절한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포함할 예정이다. 롯데손해보험은 2020년 9월말 현재 총 15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곽진산 기자 jinsan@

KB 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업 계 최 초 맞 춤 형 구 독 서 비 스

월 1만 원으로 개미지옥에서 탈출하는 법

“ 친구도, 유튜브도, 찌라시도 따라가지 마라!”



소액 투자자를 위한 업계 최초의
맞춤형 구독 서비스

KB증권 프라임클럽 오픈

오직 당신을 위한 맞춤형 리포트가 옵니다
실시간 투자 정보는 물론 자산 관리를 위한 전문 PB 상담까지
첫 이용 고객 3개월 구독료 무료 혜택 놓치지 마세요
*3개월 이후 구독료 월 1만원, 자세한 사항은 프라임 센터(1566-0055),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able,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1791호(2020년 4월 20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 HTS, 홈페이지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0.1273%+2,000원 / 모바일 0.1973% 일률적용 합니다.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은행연계/비대면계좌) HTS, 홈페이지 0.015% / 모바일 0.12% 일률적용 합니다.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투자성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심의결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KB 증권**

연말 성수기 맞은 산업계 최악엔 연쇄 가동 중단

‘2차 섯다운 공포’

▶1면서 계속

삼성·기아차 확진에 생산 차질
공장 풀가동 전자업계 방역 비상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올 수도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전 8시부터 가동 예정된 냉장고 제조 라인을 방역지침에 따라 2일까지 폐쇄기로 했다”고 말했다.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 공장 폐쇄 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공장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 기아차 광주공장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동을 중단한 1공장은 셀토스와 쏘울을, 2공장은 스포티지와 수출형 쏘울 등을 각각 생산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 사례

삼성전자	광주·구미사업장, 중국 텐진·쑤저우 공장, 미국, 인도, 폴란드 공장 등
LG전자	중국 텐진 공장, 멕시코 공장 2곳, 미국, 인도 공장 등
기아차	광주 공장, 소하리 공장
현대차	아산 공장, 미국 공장 등
SK하이닉스	중국 충칭 공장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

이날 LG화학 청주공장 직원 5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모두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해 일단 공장은 정상 가동하고 있다. 이날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LG전자 서초 R&D캠퍼스, SK 서린동 본사 등에서도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올 초 1차 섯다운 당시 생산 차질 등을 겪은 산업계는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방역에 힘을 기울여 왔지만, 늘어나는 확진자

에 초조해하고 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등 소품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4분기를 맞아 공장을 풀가동하며 대응하고 있는데, 가동 중단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월 삼성전자는 구미사업장 확진자로 공장 가동을 중단해 ‘갤럭시Z폴립’ 등의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이번 광주공장 생산라인 중단으로 인한 냉장고 생산 차질도 불가피하다. 같은 기간 완성차 업계도 중국 부품공장 가동 중단으로 최대 3주간의 가동 차질을 겪은 바 있다. 국내에서 같은 일이 발생하면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

차 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부품 협력사로부터의 감염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긴 힘들다. 현대차의 경우 1차 협력 업체만 300개가 넘고, 현대차 울산공장 내·외부로 다니는 부품 이송

차량이 2만 대에 달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가전, 반도체,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글로벌 주요 거점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커 글로벌 연쇄 섯다운까지 우려된다.

특히 반도체 업계로 퍼진다면,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메모리 공급 부족이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1년 내내 24시간 돌아가는 메모리 반도체 공장 특성상 단 한 차례의 가동 중단도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에 막대한 타격을 미친다.

이미 지난달 26일 중국 충칭의 SK하이닉스 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생산을 잠정 중단하고 직원 3200여 명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 검사를 실시했다. 해당 공장은 SK하이닉스 낸드플래시 생산의 4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산업계는 해운 물동량 증가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HMM은 이날 저

녁 부산항을 출항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5번째 임시 선박으로 46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HMM 인테그랄호’를 투입했다. 이 회사 측은 “국내 기업들의 긴급한 대미 수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선박을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선박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계 해운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반기 위축됐던 해상 물동량이 하반기부터 급증하면서 선박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해운산업 분석기관인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세계 미운항선박률은 5월 말 역대 최대치인 11.6%까지 증가한 이후 11월 기준 역대 최저치인 1.5%로 감소했다.

소비심리 위축도 산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앞서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던 상반기에도 업계는 불맞이 성수기를 놓치는 등 큰 피해를 봤다.

SK넥실리스 ‘동박공장 후보지’ 폴란드 법인 설립

배터리 소재 ‘환경영향평가’ 진행
첫 해외공장 美·유럽·동남아 압축

SK넥실리스가 폴란드에 배터리 핵심소재인 ‘동박’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평가 조사에 돌입했다. 동박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음극 집전체 역할을 하는 소재로, 얇을수록 배터리 고용량화, 경량화에 유리하고 넓고 길수록 고객사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SK넥실리스는 2013년 6μm(마이크로미터) 두께의 동박을 세계 최초 양산했고, 2017년에는 5μm 동박을 세계 최초로 양산한 뒤 작년에는 세계 최초로 4μm 동박을 30km 길이로 양산하는 데 성공하며 앞선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30일 배터리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넥실리스는 SK넥실리스 폴란드(SK Nexilis Poland sp. z o.o.)를 설립하고 환경 영향 평가 등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환경 영향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법인이 필요하다”며 “해당 법인을 시장 조사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SK넥실리스는 최근 배터리에 사용되는 동박의 수요가 급증하자 해외 생산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후보지를 유럽과 미국, 동남아시아 등 3곳으로 압축하고 고객사와의 접근성, 가격 경쟁력 등을 계산해 최적의 장소를 고를 예정이다.

SK넥실리스가 유럽을 택한다면 법인을

세운 폴란드에 생산공장이 세워질 가능성이 크다. 해외공장 건설 발표 초반에는 헝가리가 후보지로 잡히기도 했다. 폴란드에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1위 업체인 LG화학의 배터리 공장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역시 SK넥실리스가 고객사와의 접근성이 높은 곳이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이 현지에서 배터리 생산공장을 구축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인건비와 값싼 전기요금 등으로 말레이시아가 SK넥실리스의 투자처일 것이라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SK넥실리스는 국내에서도 총 3600억 원을 투입해 5공장과 6공장을 증설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1분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LG클로이, 이번엔 GS25 편의점 진출

LG사이언스 건물 내 상품 배송

LG전자가 GS리테일과 함께 실내 로봇 배송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30일 밝혔다.

LG전자는 최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 스파크 내에 있는 GS25강서LG사이언스점에서 ‘LG 클로이 서브봇(LG CLOi ServeBot)’을 이용해 상품을 배송하는 로봇배송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LG 클로이 서브봇은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부터 9층까지 층간을 오가며 도시락, 샌드위치, 음료 등을 배달한다. LG전자는 이번 시범 서비스를 통해 실내 로봇배송 솔루션의 편의성과 사용자 경험(UX)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LG 클로이 서브봇(서랍형)은 가로, 세

로, 높이가 각각 50cm, 50cm, 130cm다. 3칸의 서랍에 실을 수 있는 무게는 최대 15kg이다. 이 로봇에는 배송 중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잠금장치가 있다. 또 관리자가 로봇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원격으로 로봇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배송이력 등을 관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LG 클로이 서브봇은 스스로 엘리베이터에 타고 내리며 자유롭게 층간을 이동할 수 있다. 사용자가 로봇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로봇은 가야 할 층에 대한 정보를 엘리베이터에 무선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동한다. GS25에 상품배송을 신청하는 것은 카카오톡 모바일앱에서 주문하기 기능을 통해 가능하다. 노우리 기자 we1228@

쌍용차 ‘레벨3’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

코란도 기반 도로 시험주행

쌍용자동차가 코란도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로 국토교통부에서 자율주행 ‘레벨 3’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하고 12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한다.

30일 쌍용차에 따르면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2017년 허가받은 티볼리에 이어 기반의 자율주행차에 이은 두 번째 차량이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자율주행 ‘레벨3’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고속도로 등 일정 구역

을 자율주행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차선 유지와 변경, 차간 거리 및 속도 유지 기능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고정밀지도(HD map)와 정밀측위 정보를 바탕으로 톨게이트와 톨게이트 구간을 고속도로의 최고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

톨게이트구간 주행은 목적지에 따라 고속도로 분기점(JC)과 나들목(IC) 진출입 주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쌍용차는 특히 램프 구간의 곡선 구간 진입 시 사전에 주행속도를 줄이고 안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행 안정성 확보와 함께 기계적 이질감을 줄이는 부분

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분기점과 나들목 진입을 위해 차량 주변 교통상황을 분석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능동적으로 변경할 뿐만 아니라, 전방의 저속 차량 추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쌍용차는 2014년 자율주행 관련 연구 개발을 시작해 2015년 자율주행 자동차 시연 행사를 진행했다. 2017년에는 티볼리 자율주행차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도로 인프라와의 통신을 통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자율주행 기술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창욱 기자 woogi@

KAI, 826억 규모 항공 시뮬레이터 계약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6일 강원 지방조달청과 ‘KA-32T 모의비행훈련장치 도입사업’을 계약한 데 이어 27일 방위사업청과 ‘T-50 시뮬레이터사업 및 TA-50 Block2 훈련체계사업’을 체결했다.

30일 KAI에 따르면 이번에 수주한 금액은 총 826억 원 규모로 계약 기간은 산림청의 KA-32T 모의비행훈련장치는 2022년, T-50 계열 훈련체계는 2023년 상반기까지다.

훈련체계는 가상훈련이 가능한 시뮬레

이터와 임무지원체계, 교보재 등이 포함된 훈련시스템이다. 실제와 같은 훈련 경험을 통해 교육 기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이 가능하다. 현재 KAI는 KT-1, T-50, KUH(수리온) 계열 등 총 8종의 훈련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T-50 계열 훈련체계는 공군 조종사의 고등비행·전술입문훈련이 가능하고, 산림청 헬기 훈련체계는 산림 조종사의 산불진화, 항공방제, 인명구조 훈련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앞으로 KAI는 첨단기술을 접목해 잠재 수요가 높은 미래형 훈련시스템 및 비행공분야로도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주혜 기자 winjh@

조상문 신임 BG장 등 넥센 임원 인사

넥센 그룹이 30일 글로벌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넥센 그룹은 이번 인

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

나’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먼저, 넥센타이어는 CP(창녕 공장)생

산BS장을 맡고 있던 조상문(사진) BS



(Business Sector)장을 글로벌 생산 BG(Business Group)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또한, 김대중 유럽 영업1 BS장, 김종명 선행연구 BS장, 노재훈 미국법인 마케팅담당을 신규 임원으로 위촉했다.

조상문 BG장은 1989년 생산팀으로 입사한 이후, 2007년 생산 팀장을 거쳐, 2014년부터 창녕 공장 생산 담당을 맡아 왔고, 이번 글로벌 BG장 승진으로 국내 공장과 중국 공장을 총괄하게 된다.

유창욱 기자 woogi@

〈12만국 이상 구축 시〉

3조1700억… 정부-이통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합의

업계 의견 일부 반영… 당초 ‘15만국 3조2000억’ 보다 완화
이통3사 “아쉽지만… 5G 투자 활성화 노력할 것” 협력 약속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 간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두고 빛은 갈등이 봉합됐다. 이동통신 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해 정부가 내놓은 확정안에 대해 이동통신 업계는 일부 아쉬움은 있으나 5G(5세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 목표에 부합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가 지급해야 하는 최저 대가가 5G(5세대) 무선국을 12만 국 이상 구축 시 3조1700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직전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옵션 가격 3조2000억 원(15만국)보다 기준치가 완화됐다.

과기정통부는 LTE 서비스가 쇠퇴기에 접어드는 2026년 시점에 3GHz 이하 대역에

서 160MHz 폭의 광대역 5G 주파수 확보를 위해 2.6GHz 대역의 이용 기간은 5년으로 고정하고, 그 외의 대역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 상황 및 특성에 맞게 5~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 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2.1GHz·2.6GHz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 기간을 3년 이후에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했다.

재할당 대가와 관련해 연구반에서는 5G 서비스를 하려면 LTE 주파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LTE 주파수의 가치는 5G 도입 영향에 따른 시나

5G 무선국 투자 옵션 (단위: 조 원)

옵션 구간	5G 무선국 수) (통신사별)	할당대가 (이통3사 합계)
옵션가격①	12만 국 이상	3.17
옵션가격②	10만 국 ~ 12만 국 미만	3.37
옵션가격③	8만 국 ~ 10만 국 미만	3.57
옵션가격④	6만 국 ~ 8만 국 미만	3.77

※ 1) 전파법 제22조의2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개설신고가 필요한 무선국(3.5GHz 대역)
2) 재할당 신청 시점 기준 각사가 6만 국 이상 될 것으로 예상

리오 분석이 필요하다고 봤다. LTE 주파수는 5G 서비스의 매출에 기여하고, 5G 투자 및 망 구축 없이는 LTE 가입자의 5G 전환도 어려워 LTE 주파수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재할당 대가는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할당 대가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5G 도입 영향에 따른 대가 분석 결과에 따라 통신사별로 2022년까지 5G 무선국을 12만 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3조1700억 원까지 가치가 하락하고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 국에 못 미칠 경우 할당 대가가 높아지는 구조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6만~8만 국 미만 시 3조7700억 원, 8만~10만 국 미만 시 3조5700억 원, 10만~12만 국 미만 시 3조3700억 원, 12만 국 이상 시 3조1700억 원이다.

앞서 17일 공개설명회에서는 15만 국의 5G 무선국 구축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통신사는 2022년까지 15만 국의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는 의견 수렴과 분석을 통해 통신 3사가 지난 7월에 발표한 5G 투자 계획보다 상향된 12만 국(통신 3사 공동이용, 소위 로밍 포함)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안에 대해 이동통신 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SK텔레콤은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 정책을 존중한다. 과기정통부가 사업자의 현실 등 제반 사항을 두루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SKT는 이번 재할당을 통해 기존 3G·LTE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KT는 “정부의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5G 품질 조기 확보 및 시장 활성화로 국민에게 최고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주파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재기 소상공인 “바리스타로 제2의 인생 도전”

박영선(왼쪽 네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송호섭(맨 왼쪽)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 이사, 조봉환(다섯 번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30일 서울 중구 스타벅스 소공아카데미에서 열린 스타벅스 리스타트 지원프로그램 교육 수료식에서 채용자 대표 바리스타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TV·모바일 쇼핑 결합한 ‘디지털 커머스’ 출범

KT 계열사 재편 ‘신호탄’

KTH-KT엠하우스 합병

KT그룹이 계열사 재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30일 KT는 계열사인 KTH와 KT엠하우스를 합병해 TV와 모바일 쇼핑이 결합한 디지털 커머스 전문 기업으로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KTH와 KT엠하우스 양사는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했다. 합병 뒤 존속법인인 KTH이며, 합병비율은 약 1대 13.3으로 KT엠하우스 주식 1주당 KTH의 신주 13.3주가 배정된다. KT는 “당국의 기업결합심사와 내년 5월경 주주총회 등을 거쳐 내년 7월까지 합병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현모 KT 대표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계열사 재편이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는 당시 “그룹 전체의 리스트럭처링, 계열사 이합집산 등 구조적 변화를 준비했다”며 “내년 정도면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첫 주자로 KTH와 KT엠하우스가 선택됐다. KTH는 디지털 홈쇼핑 ‘K소품’ 등을 영위하는 업체다. 1991년 설립됐으며 지난해 기준 매출액 3223억 원, 영업이익 107억 원을 기록했다. KTH의 지난 3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연평균성장률은 각각 19%, 37% 증가하는 등 고성장을 이

뤼다. KTH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통합 IT인프라 환경인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해 빅데이터 분석 기반 상품 통합관리, 편성, 마케팅 분석체계를 갖추고 대규모 유통 사업자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9월에는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커머스 플랫폼인 ‘TV MCN’을 론칭했다.

KT엠하우스는 모바일 쿠폰 시장의 초기 사업자로 모바일 쿠폰 B2B 시장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됐다. 지난해 매출액은 334억 원, 영업이익은 75억 원이다. 3년간 연평균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7%, 21% 증가했다. 최근에는 모바일 쿠폰 사업을 넘어 한정판 스니커즈 리셀(Resell·재판매) 플랫폼 ‘리플(REPLE)’ 서비스를 출시하며 커머스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합병법인은 양사가 보유한 ICT 인프라 및 기술역량, 솔루션 사업을 토대로 유통 채널 및 상품 경쟁력을 확대하고 모바일 중심의 신사업 강화 등 차별화된 통합 커머스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KTH가 보유한 상품 수급, 마케팅, 배송, 관리 등 유통 인프라와 KT엠하우스가 보유한 3만 기업고객과 9만 개의 오프라인 가맹점으로 고객가치를 창출할 전망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세븐나이트2·미르4… ‘리니지 대항마’ 될까

넷마블 대표IP ‘세븐나이트2’
애플·구글스토어 매출 상위권
위메이드 ‘미르4’도 인기 1위

올해 연말 출시된 모바일 게임 신작이 내년 시장을 흔들만한 영향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리니지 시리즈가 장악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시장이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시장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과 ‘리니지2M’에 맞설 수 있을 만한 신작 모바일 게임이 출시하면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우선 넷마블은 11월 18일 ‘세븐나이트2’를 선보이고 상위권 도약을 시작했다. 세븐나이트2는 넷마블의 대표 IP인 ‘세븐나이트’의 후속작으로 전작의 20년 뒤 세계를 그리고 있다. 세븐나이트2는 출시 7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 3일 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2위를 기록하며 리니지2M을 밀어낸 바 있다. 현재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3위에 자리하며 2위를 추격하는 모습이다.



넷마블 ‘세븐나이트2’



위메이드 ‘미르4’

위메이드는 11월 25일 ‘미르4’를 선보였다. 원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갤럭시스토어 등 4대 마켓에 선보인 미르4는 11월 30일 기준 4대 마켓 모두 인기 1위를 기록하며 순위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순위는 10위권 밖에 머물러 있지만 인기 1위를 기반으로 연말 순위 상승을 노린다는 목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지스타2020에서 “내년 게임 순위가 발표되는데 당연히 1등하고 싶다”며 “게임업계의 평가를 들어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성

공을 자신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내년 게임 시장에서 두 게임을 요주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 올해 모바일 게임 시장 상위권을 리니지 시리즈가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기적의 검’, ‘원신’ 등 수 많은 중국산 게임이 상위권 도약을 노렸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하고 순위에서 밀려났다. 국내 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상위권에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뿐만 아니라 미르4와 세븐나이트2의 경쟁이 미리보는 ‘대한민국 게임대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매년 11월 열리는 대한민국 게임대상은 한 해동안 가장 인기있었던 게임을 선정하는 자리다. 최근 몇 년간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년도 11~12월에 출시해 1년간 인기를 얻은 뒤 수상하는 전략을 택했다. 올해 게임대상을 받은 넥슨의 ‘V4’ 역시 전년도 11월에 출시한 게임이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미르4와 세븐나이트2는 각 회사가 사활을 걸었다 해도 이상할 것 없을 정도로 집중하고 있는 라인업”이라며 “두 게임 모두 리니지를 밀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 시장 공략이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성준 기자 tatio@

‘상권 르네상스’ 대상지 8곳 추가 선정

서울 동작·경기 양평·강원 춘천 등… 5년간 80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구도심의 낙후된 풀뿌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4차(2021년) 사업 대상지 8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정 지자체는 서울 동작, 경기 양평, 강원 춘천, 충북 제천, 전북 부안, 전남 진도, 경북 문경, 경남 창원 등이다.

이로써 지난 2018~2019년까지 3차에 걸쳐 선정한 상권 12곳을 포함해 ‘상권 르네상스’ 사업 대상지는 총 20곳이 됐다. 중기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총 30곳의 상권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상권 르네상스’는 구도심의 낙후된 풀뿌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단일 전통

시장이나 상점이 대상의 개별지원을 넘어 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5년간 80억 원 규모의 환경개선과 상권활성화를 종합 지원한다.

신규로 선정된 서울 동작은 사당과 이수역 사이를 연결해 상권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공방거리 체험프로그램, 특화상품 개발 등을 지원해 남녀노소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동작의 대표 테마거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박지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지자체와 상인회, 지역 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편의점, 위기에 강하다?... 코로나에도 덩치 키워

올들어 외식업 3만 곳 문 닫을 동안 2483곳 새로 오픈
창업비용 적고 편의점 본사 지방 확대 전략 맞물려 강세
점포당 월 매출은 떨어져... '제 살 깎아먹기 경쟁' 우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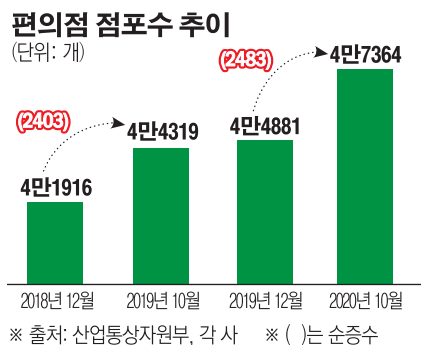
코로나19의 확산 와중에 올해 편의점들은 덩치를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증에 소상공인의 폐업이 줄을 잇는 가운데서도 그나마 편의점을 안정적인 창업으로 판단해 이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율협약으로 개점이 어려워지면서 지방 출점에 속도를 내고 있는 편의점 본사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제 살 깎아먹기 경쟁에 점포당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점이 업계 전체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 2483개 오픈... 작년보다 80개 증가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GS25와 CU(씨유),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의 총 점포 수는 3만 9557개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3만 7811개보다 1746개 늘어난 수치다.

산업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이마트24와 미니스톱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 점포 수는 더 크게 불어난다. 10월 기준 이마트24의 점포 수는 5215개로 올 들어 727개 늘며 작년 같은 기간(657개 순증)보다 70개 더 늘었다. 미니스톱은 올 들어 10곳의 매장을 늘리는 데 그쳐 작년 같은 기간 순증 점포수(38개)에는 못미친다.

이들 모두 합칠 경우 올해 늘어난 편의점 수는 2483개에 달한다. 작년 같은 기간 2403개에 비해 80개 더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여파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에 나선 것과 대비된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42만 회원 업소 중 2만9903개



업소가 폐업했고, 3919개 업소가 휴업에 들어갔다. 부동산114도 올해 2분기 서울시내 상가 수는 37만321곳으로 1분기(39만1499곳)보다 2만1178곳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중 음식점의 경우 절반인 1만 40곳이 문을 닫았다.

◇위기에 안정적·창업비용도 적은 편= 편의점 창업이 늘고 있는 것은 편의점이 위기에 강하다는 점이 배경이 됐다. 취업이 어려워지고 외식업 등의 폐업은 늘고 있지만 대기업의 안정적인 시스템 아래 독자적인 경영 노하우가 크게 필요치 않다는 점에서 편의점 창업은 도전해볼 만한 사업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편의점은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창업비가 적다는 점도 장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CU의 작년 가맹사업자 부담금은 7279만 원인데, 가맹비와 보증금, 인테리어비 등을 대부분 본사가 지원해 실제 드는 금액은 2000만 원대로 떨어진다. GS25와 세븐일레븐도 각각 7270만 원과 5242만 원이다.

이에 비해 교촌치킨은 1억608만 원이며, BBQ는 1억2718만 원, 커피전문점 이디야는 1억2490만 원이 필요하다.

◇편의점 지방 확대 전략과 맞아떨어져=편의점 창업 수요는 본사들의 지방 점포 확대 전략과도 맞아떨어진다. 지난해 공정위의 자율 협약에 따라 편의점들은 자체적으로 신규 출점을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를 따르기로 했다. 문제는 각 지자체마다 각각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가 다르다는 점이다. 서울의 경우 100m를 따르고 있지만, 지방 권역의 대부분은 50m다.

하지만 지난해 제주도에 이어 올해 4월 경기도와 충남 아산 등이 100m로 권고하면서 전국적으로 지정거리가 확대되는 추세다. 편의점 본사로서는 지자체가 담배 소매인 거리를 확대하기 전에 경쟁력 좋은 상권에 미리 점포를 늘려나야 해 지방 공략에 한창이다.

◇점포당 월매출은 떨어져=전국적으로 보면 포화상태인 편의점의 지속적인 출점으로 기존 가맹점주는 매출이 떨어져 속앓이를 하고 있다. 2018년만 해도 1~10월까지 편의점 3사의 점포당 매출은 월 평균 5201만 원이었으나 지난해 5176만 원으로 떨어졌다. 매출 상위권인 GS25 점포의 2018년 월평균 매출은 5600만 원에서 작년 5543만 원으로 주춤했고, CU도 4942만 원에서 4915만 원으로 뒷걸음질쳤다.

올해는 같은 기간 평균 4993만 원으로 4000만 원대로 주저앉았다. 월 평균 점포당 매출액 증감율은 지난해 -1~2% 수준에서 올해는 -3~-4%대로 확대됐다.

한 편의점 가맹점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원가나 유흥가 등의 점포는 죽을 맛”이라며 “본사는 가맹점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주현 기자 jooh@



현대백 '홀리데이 컬렉션'
현대백화점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판교점·천호점·미아점 3개 점포의 선물 상품 편집숍 '기프트 페이지(A GIFT PAGE)'에서 '2020 홀리데이 컬렉션'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2020 홀리데이 컬렉션'은 지친 마음의 치유와 행복의 의미를 담은 제품들로 구성했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우유 소비 감소에 고민 깊은 업계 '단백질 보충제' 앞세워 '실적 보충'

매일유업 '셀렉스'·일동 '하이문' 등 위기극복 카드

출산을 저하와 1인당 우유 소비량 감소로 이고고를 겪고 있는 유업계가 단백질 보충제를 위기 극복 카드로 꺼내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출생아수는 18만820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줄었다. 낙농진흥회가 조사한 지난해 1인당 연간 우유 소비량도 33kg으로 전년 대비 1kg 감소했다. 올해 우유 소비량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로 등교일수가 줄면서 우유 급식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업계는 커피믹스, 커피음료, 배달 이음식 등 출산을 저하와 우유 소비 감소에 따른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꾀해 왔다. 최근 들어서는 성인 건강에 초점을 맞춘 단백질 보충제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선발주자인 매일유업, 남양유업에 이어 올 들어 일동후디스, 푸르밀, 연세우유, 롯데푸드 등이 줄줄이 단백질 보충제 브랜드를 론칭했다.

30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인사이트리포트에 따르면 2017년 세계 단백질 식품시장규모는 약 13조원으로, 연평균 12.3%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에는 32조8800억 원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단백질 보충제 시장을 선도하는 매일유업은 생애주기별 영양설계 전문 브랜드 '매일 헬스 뉴트리션'을 통해 '셀렉스 스포츠 웨이프로틴파우더'를 출시한 후 바 제품과 음료까지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가장 최근 출시한 '셀렉스 매일 마시는 프로틴'은 멸균 테트라팩 용기에 담아 휴대와 음용이 편리한 것이 특징이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한국통합의학회 근감소증연구회와 함께 단백질 보충제 '하루근력'을 선보였다. 면역력 강화를 위해 6년간 홍삼을 함유해 제품을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 비타민A, 비타민C,



매일유업 '셀렉스' 매일 마시는 프로틴(왼쪽), 푸르밀 '퍼펙트 파워쉐이크'.

마그네슘, 아연 등 6가지 영양성분도 함께 담았다.

올 들어 단백질보충제 시장은 한층 뜨거워졌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근력 유지 등을 위해 단백질 섭취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동후디스의 단백질 보충제 '하이문 프로틴 밸런스(하이문)'은 미스터 트롯 출연자인 가수 장민호를 모델로 내세우며 후발주자임에도 중장년층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하이문'은 지난 2월 TV홈쇼핑을 통해 첫 선을 보인 이후, 방송 때마다 매진 행진을 기록중이며 출시 9개월만에 누적판매 100만개를 돌파했다.

푸르밀은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에이플네이처 칼로바이와 손잡고 마시는 고단백질 '퍼펙트 파워쉐이크' 2종을 출시했다. '퍼펙트 파워쉐이크'는 휴대성, 편의성이 높은 액상 컵 형태로 개발됐다. 한 컵당 삶은 계란 2개가 넘는 분량의 단백질 13g이 함유돼 운동 전후에 간단하게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다.

롯데푸드 파스퇴르도 성인용 단백질 강화 영양식 '닥터액티브'(Dr. Active)를 내놔이며 연세우유도 마시는 단백질 '맥스프로틴'을 내놓고 NS홈쇼핑을 통해 단독 론칭했다.

이밖에 빙그레가 출시한 '마시는 요플레 프로틴'과 '떠먹는 요플레 프로틴'은 월 50만 개 이상 팔리고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이제 세계에서 경쟁” CU 국내외 점포 1만5000점 돌파

CU가 한국을 넘어 몽골까지 글로벌 점포수 1만 5000점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CU가 1990년 10월 1호점인 가락시영점을 오픈한 이후 1만 5000점의 문을 열기까지 총 1만1000일, 약 30년 1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연평균 약 500개, 월평균 42개, 일평균 1.4개의 점포를 개점하며 대한민국 편의점 역사의 대기록을 세운 것이다.

CU는 1호점을 시작으로 2000년 643개, 2005년 3151개, 2010년 5345개, 2015년 9409개, 2020년 1만5000개 점포의 문을 열면서 30년 간 고객들에게는 편리한 생활 플랫폼으로, 가맹점주들에게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으로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다.

이처럼 국내 시장의 내실 있는 성장을 토대로 지난 2018년 업계 최초로 몽골 시장에 편의점 사업을 수출해 11월 말 102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시장에도 잇따라 진출해 내년 상반기 내 1호점 개점을 앞두고 있다.

CU의 이러한 성장은 지난 30년간 가맹점주들과의 파트너십을 최우선으로 점주 친화형 가맹 시스템을 꾸준히 구축해 온 결과라고 회사측은 설명한다. 이 업체는 가맹점주의 수익성 강화와 편의 향상을 위해 업계 최초로 수익 배분율을 최대 80%로 늘린 신 가맹형태를 도입했으며 매년

가맹점 상생 협약을 맺고 생애주기별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점포 매출 개선 프로그램인 '클리닉 포 씨유(Clinic for CU)'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노무·법률·세무 무료 상담과 의료서비스 할인 혜택 등 프랜차이즈 업계 최고 수준의 가맹점 지원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이건준 BGF리테일 사장은 “지난 30년간 고객과 가맹점주들을 향한 한결 같은 마음으로 내실과 외형적 성장을 모두 이뤄온 만큼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로 뻗어나가는 자랑스러운 수출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한국야쿠르트, 온라인몰 '프레딧' 연다

뷰티서 생활용품까지 무료 배송

한국야쿠르트가 온라인몰 '프레딧(Fredit)'을 론칭하고 종합유통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한다.

'프레딧'은 '정직한 신선·유기농 선별샵' 콘셉트의 온라인 라이프스타일 몰이다. '올바른 삶을 위한 착한 습관'이라는 슬로건 아래 △화장품, 여성, 유아, 생활용품으로 구성된 '프레딧라이프(Life)' △유제품, 건강기능식품, 신선식품 중심의 '프레딧푸드(Food)' 카테고리 운영한다. 기존 온라인몰 '하이프레시'는 '프레딧푸드'로 통합된다.

'프레딧'은 한국야쿠르트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의지와 맞닿아 있다.

'프레딧'의 특징은 엄격한 입점 기준에 있다. '프레딧 라이프'는 유기농, 비건 또는 천연·자연 유래 성분의 함량을 공개하거나 동물보호, 친환경 등 클린뷰티 가치를 추구하는 제품에 한해서만 취급, 판매한다. 모든 제품의 제조 성분과 관련 인증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차별화된 서비스도 강점이다. 고객이 입력한 정보에 따라 상품을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와 함께 전 제품 정기배송이 가능하다. 단 한 번의 신청으로 화장품, 여성용품과 같이 구매 패턴이 일정한 제품을 정



해진 날짜마다 받아 볼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주문수량, 금액에 관계없이 전국 1만1000명 프렌치 매니저가 배송비 없이 전달한다.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 반품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프레딧 라이프' 전 제품에 대해 친환경 소재 종이봉투와 비닐에 담아 배송한다.

김혜지 기자 heyji@

연말에도 ‘IPO 러시’… 공모주 막차 타볼까

공모주 시장에서 연말 랠리가 시작되는 모습이다. 코스닥이 900선을 넘보는 데다, 상장 후 ‘파상’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후 상장 첫날 상한가)’을 노린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 박히트 이후에도 50조원의 유동성이 증시 주변에 머무르다가, 결국 가장 투자 리스크가 낮다고 판단되는 공모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12월 8개 기업이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9월에는 스팩 제외 10개 기업이 상장했고, 10월, 11월에는 각각 8개의 기업이 상장 절차를 마무리했다.

우선 가장 이른 시일 내 상장하는 기업은 엽코, 엔에프씨로 12월 2일 상장한다. 엽코는 게이밍 기어(Gaming Gear) 및 뉴라이프 가전 브랜드인 컴퍼니로, 일반 청약 경쟁률에서 978대 1을 기록했다. 화장품 원료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엔에프씨 역시

코스닥도 랠리… 900선 코앞
리스크 낮은 공모주로 뭉치듯
이달 엽코 등 9개사 상장 대기

같은 날 상장한다. 엽코, 엔에프씨의 유통가능 주식 지분율은 각각 43%, 38% 수준이다. 유통주식수가 많으면, 상장 직후 시장에 해당 물량이 대거 쏟아질 수 있다.

이어 포인토모바일은 12월 3일 상장한다. 산업용 스마트폰·블루투스 바코드 스캐너 등을 생산하며, 일반 청약 경쟁률은 1842.97대 1을 기록했다. 아마존과 전략적 관계를 형성했다는 소식에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상장 후 포인토모바일의 유통가능 주식 물량은 36%다. 의약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클리노믹스는 4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

12월 IPO 청약 일정

기업명	일반 청약	상장
엔에프씨	원료	12월 2일
엽코	원료	12월 2일
포인토모바일	원료	12월 3일
명신산업	원료	12월 7일
퀀타메트릭스	11월 30일~12월 1일	12월 9일
엔젠바이오	12월 1~2일	12월 10일
인바이오	12월 2~3일	12월 11일
티엘비	12월 3~4일	미정
이엑스알켄달스퀘어리츠	12월 4~8일	미정
에프엔가이드	12월 8~9일	미정
알체라	12월 10~11일	12월 21일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12월 8~9일	12월 22일

공모주 청약 일정이 특정 주간에 쏠리기도 했다. 30일까지 일반 청약을 진행한 명신산업이 12월 7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 명신산업은 차량용 부품 제조사이며, 주요 고객사로 현대·기아차 등을 두고 있다. 테슬라에 핫스탬핑 등 자체 부품 공급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주로 엮였다.

퀀타메트릭스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공모청약을 진행하고, 9일 상장한다. 신속항공제검사 장비 및 키트, 분자면역 진단장비 등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엔젠바이오는 12월 1~2일 공모 청약을 진행하고 10일 상장한다. 이어 인바이오가 2~3일 공모 청약을 진행한 후 1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인바이오는 비료, 농약 및 살균, 살충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곳이다. 인공지능(AI) 영상인식 기업 알체라는 12월 10~11일 공모청약을 진행하고 21일 상장할 예정이다.

티엘비는 3~4일 공모 청약을 진행한다. 이엑스알켄달스퀘어리츠는 4~8일, 에프엔가이드의 공모 청약일은 8~9일이다. 세 곳 모두 상장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상가포르 국적 산악 개발기업인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가 12월 22일 유일하게 유가증

권 시장에 상장한다. 공모청약 예정일은 12월 8~9일이다. 기관 대상 수요예측은 2~3일 진행되며, 희망공모가는 2만5000~3만2000원 사이다.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는 국내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의 관계사다.

전기차,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시장의 관심이 높은 기업이 상장 절차를 밟는데 이어 개인투자자 자금 여력이 역대 최고로 치솟은 점도 청약 흥행 요소로 꼽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투자자 예약금은 63조2348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SK증권 리서치센터 관계자는 “올해까지 IPO시장에서 공모 절차에 돌입하는 업체 수가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증시 불확실성이 완화하는 시점에 유동성 장세가 겹쳐 내년 공모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인아 기자 ljh@

신한금투, 인니기업 610억 김치본드 발행

누적 1억7000만 달러 달성

신한금융투자는 인도네시아 제지업체 ‘PT OKI Pulp & Paper Mills’ (이하 OKI)의 5500만달러(약 610억원) 규모 김치본드(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 발행 주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한국투자증권과 공동으로 대표 주관사를 맡았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 방문 실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전문 인력을 실사에 투입하고 경영진과의 화상회의, 드론을 이용한 생산 시설 촬영 등을 통해 실사를 진행했다.

OKI는 세계 1위의 펄프 생산 능력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서 세계 최대 종합제지

그룹인 ‘아시아 펄프 & 페이퍼 그룹’(Asia Pulp & Paper Group)의 핵심 계열사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8년 인도네시아 기업의 첫 김치본드 발행을 대표 주관했으며,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가 대표 주관한 김치본드 발행 규모는 총 1억70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김치본드 이외에도 지난 10월 인도네시아 종합 미디어그룹 PT 글로벌 미디어콤(Global Mediacom Tbk)의 보증부 FRN(변동금리채권) 리파이낸싱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2019년에는 인도네시아 4대 유니콘 벤처의 하나인 부칼라팍의 전환우선주에도 투자하는 등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에서 입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신라젠, 조건부 상장유지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에 개선기간을 주기로 했다.

거래소는 30일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1월 30일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신라젠의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지난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지난 8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으나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해 이날 재개했다. 신라젠의 주식 거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지난 5월 초부터 정지된 상태다. 거래 정지되기 직전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8666억원이었다.

설경진 기자 skj78@

〈이천 물류센터〉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로 쪼개졌다 ‘화재’로 재결합? 메이트플러스, 젠스타에 흡수합병

업계 1위 통합, 알고보니 한식구
물류 제외한 중복사업 합치기로

GENSTAR
젠스타서비스

MatePlus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업계 1위 메이트플러스가 일부 사업부만 남겨놓고 동종업체 젠스타에 흡수합병된다.

화재사건으로 관계사로 쪼개졌던 두 회사가 다시 통합되는 것이다.

30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메이트플러스는 지난달 27일 오후 젠스타와의 중복되는 사업부 통합을 결정하고 사내 메시지를 통해 임직원에게 해당 내용을 공지했다.

이에 메이트플러스의 물류사업부는 그대로 남겨두고, 자산관리(PM)와 임대차 관리(LM), 실사 등의 사업부를 젠스타의 해당 사업부와 통합한다. 메이트플러스의 100% 자회사인 부동산 서비스기업 에비슨영코리아의 경우 주력 사업부인 매입·매각 사업부와 리테일업은 남겨두고 부동산 컨설팅과 리서치 사업부는 젠스타로 합쳐지게 된다. 즉 3개사의 중복되는 사업부를 젠스

타를 중심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 미정이지만 연말까지 통합법인의 새로운 사명도 확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젠스타는 3개사의 사업부가 합쳐지게 되면서 커지게 되고, 메이트플러스와 에비슨영코리아의 사업영역은 축소되는 셈이다.

젠스타와 메이트플러스는 사실 뿌리가 같다.

2009년 삼성그룹 계열사 부동산 자산을 관리해온 샘스(SAMS)가 젠스타와 메이트플러스로 분리됐다. 샘스가 관리하던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에서 2008년 12월 화재가 발생하며 문제가 발생한 영향이었다.

이후 2017년 메이트플러스가 자산관리를 맡았던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에

서 화재가 발생하자 시설관리(FM) 회사인 서브원은 메이트플러스에 50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걸었다.

이로 인해 자금난에 처한 메이트플러스의 지분을 젠스타의 이상철 회장이 매입하게 됐고, 두 회사는 이상철 회장 중심의 관계사 구조를 형성하게 됐다. 이상철 회장은 삼성생명 부동산사업부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동산총괄을 역임한 인물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상철 의장은 메이트플러스 지분의 54.15%를 가진 최대 주주다.

업계 관계자는 “2008년 화재사건으로 쪼개졌던 회사가 사실상 2017년 또 다른 화재사건 발생한 이후 통합이 된 것”이라면서 “업계 1위 메이트플러스가 자신보다 매출이나 업계 순위가 낮은 업체(젠스타)에 사업부가 합병되는 형태로 통합이 결정돼서 업계에서는 다소 놀라운 결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해외법인 3분기 수익 2443억… 2년 만에 100%

미래에셋 박현주 ‘글로벌 전략’ 통했다

국내 금융업계를 선도해 온 미래에셋이 글로벌 투자 사업에서도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박현주(사진) 미래에셋대우 홍콩 회장 겸 글로벌 투자전략고문이 강조해온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이 실적을 견인했다는 평가다.

30일 미래에셋그룹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미래에셋그룹 해외법인의 세전이 이익이 244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회계연도 전체 해외이익 2383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올해 전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은 2년전과 비교해 1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외법인들이 지난해 실적을 뛰어넘는 성과를 달성한 것을 비롯해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해외투자를 늘려온 결과다.

9월말 기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자기자본은

1조 8888억원으로 전체 300여개 운용사 중 유일하게 1조원이 넘는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2조 2138억원에 달해 운용사 자기자본 2위~6위의 것을 합친 것보다 크다. 증권사들과 비교해도 10위권 내 해당하는 수치다.

미래에셋대우의 자기자본은 연결 기준 9조5732억원으로 2위와는 무려 4조원 가까이 앞서있다. 또한 미래에셋그룹의 전체 자기자본은 16조원 수준으로 글로벌 진출과 해외투자 확대 등 박현주 회장의 의지가 강해 창립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자기자본 확대가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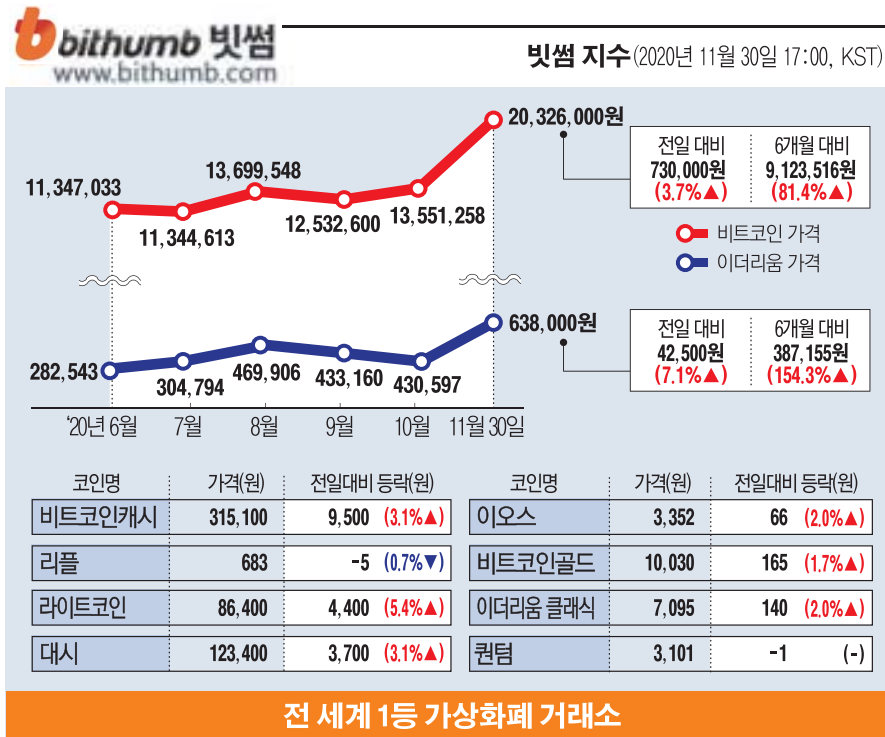
3분기까지 미래에셋자산운용 해외법인의 세전이이익은 70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도 해외법인 한 해 실적인 674억원을 올해 3분기 만에 넘어서는 수치로 금융투자업계에서 차별되는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같은 해 캐나다 선두 ETF 운용사인 호라이즌 ETFs와 호주 4대 ETF 운용사 중 하나인 베타셰어즈를 인수했다.

2018년에는 전세계 ETF 시장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 라이징스타로 주목받는 ETF 운용사 글로벌X를 인수했다. 작년에는 글로벌X와 다이와증권그룹이 일본 현지에 합작법인 ‘글로벌X 재팬’을 설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다. 9월말 기준 9개국 미래에셋 글로벌 ETF의 순자산은 53조원 수준으로 전세계 운용사 중 16위 규모를 기록 중이다.

손은지 기자 eoml@



“5000만원이면 집 산다” 파주에 몰리는 갭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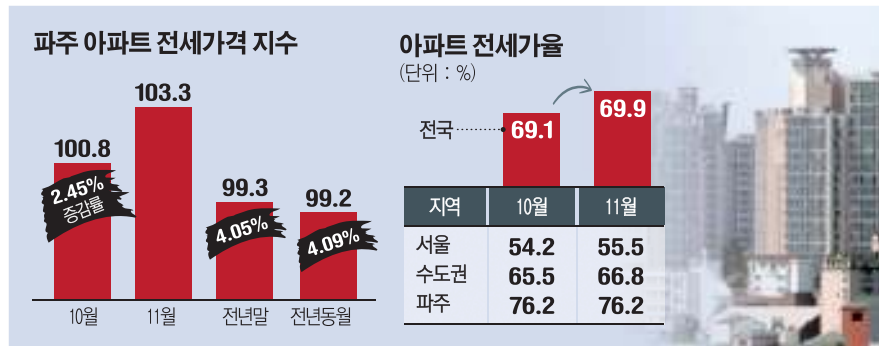
규제 비껴나며 투자 환경 조성
전세가 급등 매매와 격차 줄어
일부 전세가, 매매 넘어서기도

수도권의 유일한 비규제 지역인 경기 파주시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몰리고 있다. 대출과 세제 등 규제가 적은데다 최근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여파로 전세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갭투자에 옹이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파주 금촌동 후곡마을주공 6단지 전용면적 59㎡형은 지난 16일 2억3500만 원에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 같은 날 1억8500만 원에 전세 계약도 체결됐다.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5000만 원에 불과했다.

인근 서원마을 뜨란채7단지 전용 75㎡형은 이달 들어서만 총 4건의 전세계약이 체결됐는데 거래가는 2억1000만~2억2000만 원 선이다. 그런데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이 아파트는 지난달 19일 2억3700만 원에 매매 거래됐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2000만 원 가량만 들고 있으면 매입이 가능한 셈이다. 현재 매매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가 2억5000만~7000만 원 수준임을 감안해도 격차는 5000만 원 아래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차이가 1000만 원이 채 벌어지지 않은 곳도 있다. 파주시 금촌동 건일장비5차 전용 59㎡형의 경우 이달 18일 1억4700만 원에 전세 계약됐다



데 이튿날인 19일 1억5000만 원에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 품귀와 전셋값 급등 현상이 나타나는데 따른 것이다. 급등한 전셋값이 매매값까지 따라잡으면서 사실상 갭투자를 부추기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셈이다. 가뜰이나 파주의 경우 비규제 지역으로 주택담보비율(LTV)이 70%까지 가능하고 대출을 받아도 전입 의무가 없다. 2주택자도 취득세가 1~3%에 불과하다.

인근 K공인 중개업소 관계자는 “1억 원 가량이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신혼부부들의 문의가 많다”며 “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집을 사놓자라는 수요자들도 있어 매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선 ‘전셋값>매매값’=보통 갭투자가 몰리면 매매가격이 상승한다. 실제 파주시도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세값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파주의 경우 전세가율(매매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수도권에서도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 등 그간 집

값 상승 흐름에서 벗어나 있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은 66.8%이나 파주의 경우 76.2%에 달한다. 서울은 55.5%에 불과하다.

이에 전세가격이 매매가보다 더 상승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파주시 아동동 팜스프링 전용 59㎡형은 지난 10일 1억63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졌는데 열흘 뒤 1억7000만 원에 전세거래가 체결됐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700만 원 정도 높다.

파주 금촌동 외재마을뜨란채 전용 59㎡형도 이달 14일 전세가격이 2억1000만 원에 최고가 거래됐는데 매매 가격은 현재 2억700만~2억4000만 원 수준이다.

금촌동 J공인 중개업소 관계자는 “보통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매매가격이 전세가격 아래로 떨어진다. 파주시도 원래는 전세가율이 높았는데 최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최근 집값 상승세도 가파라지고 있어 강동전세 우려는 시기상조로 본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종부세 폭탄’?… 3명 중 2명은 100만원 이하

1주택자 10만~30만원 추정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3명 중 2명은 세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폭탄’이란 말이 무색한 상황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66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7000명 늘었다. 고지세액은 1조814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상향 효과가 더해진 결과다. 정부는 시가 9억~15억 원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6%에서 69%로, 15억~30억 원 주택은 67%에서 75%로, 30억 원 이상은 69%에서 80%로 각각 상

향 조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85%에서 올해 90%로 올렸다.

세액 규모별로 100만 원 이하가 43만 2000명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이들 상당수는 1주택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올해 새롭게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1주택자들의 경우 10만~30만 원 안팎을 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령 올해 주택 시세가 13억5000만 원이라면 공시가는 9억 원에서 9억3000만 원으로 오르게 되는데, 이 경우 새롭게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세액은 8만 원(1세대 1주택 기준)에 불과하다. 이 금액도 납부자가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인 경우, 70%까지 공제된다.

시가가 지난해 27억 원에서 올해 32억

5000만 원으로 오른 1주택자도 세 부담은 801만 원으로 329만 원 늘지만, 최대 공제 적용 시 세액은 240만 원으로 98만 원 오르는 데 그친다. 2주택 이하 보유자에 대해선 전년도 기준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에 과세하지 않는 세 부담 상한이 적용돼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인구는 약 5185만 명이었다. 여기에서 종부세 납부자는 1.3%, 종부세 100만 원 초과 납부자는 0.5% 정도다.

종부세 인상은 주로 다주택자에 집중됐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7만6000명, 이들에 부과된 세액은 1조4960억 원이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에 달하는 규모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사무실·기숙사 한곳에 ‘도안 더리브 시그니처’

전매 제한 없고 세제 혜택

SGC이테크건설이 대전 도안신도시에 지식산업센터인 ‘도안 더리브 시그니처’ 분양에 나섰다.

도안 더리브 시그니처는 대전 유성구 북용동 일대에 지어진다. 지하 1층~지상 16층, 연면적 약 9만9551㎡ 규모다. 공장(제조형, 업무형) 385호실과 기숙사 204호실, 상업시설 192호실 등으로 구성된다.

시행자는 하나자산신탁이고, 시공은 SGC이테크건설이 맡았다. 1350억 원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한양증권 특수IB센터가 주관한다.

도안 더리브 시그니처의 건물 구조를 살

펴보면 지하 1층은 주차장, 1~2층은 상업시설, 3~7층은 드라이브인 시스템의 제조형 지식산업센터와 섹션형 오피스로 구성됐다. 상층부는 투타워(two-tower)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1동 8~16층은 섹션형 오피스, 2동 8~13층은 기숙사로 이뤄진다. 주차수용시설은 법정대비 206%를 초과하는 총 795대 규모로 구축된다.

지식산업센터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난 상품으로 전매 제한, 종과세 및 대출 부담이 없다. 준공 후 최초로 분양받는 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SGC이테크건설은 플랜트 사업의 강자로, 주거 브랜드인 ‘더리브’를 앞세워 건설



및 토건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전국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서 42위에 올랐다. 지난해 53위에서 11계단 상승한 것이다.

그동안 서울 ‘여의도 더리브 스타일’, 수원 ‘호매실역 더리브 스타일’, ‘천안아산역 더리브’, 대구 ‘죽전역 코아루 더리브’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성공 분양을 이끌어 냈다.

도안 더리브 시그니처 견본주택은 대전 유성구 용계동에 마련돼 있다. 준공 예정일은 2023년 2월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계약갱신 두 달 남았다면…

12월 10일 전 청구하세요

사용 기한, 계약 만료 ‘두 달 전’으로 바껴

12월 10일부터 새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기한이 임대차 계약 만료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으로 앞당겨진다.

계약 갱신을 앞둔 전월세 세입자는 계약 만료일 두 달 전까지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전이다. 하지만 12월 10일 이후에는 6개월~2개월로 바뀐다.

‘초일불산입’ 첫날 빼고 계산 전화·문자 전달 증거 남겨야

앞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법이 내달 10일 시행되면서 일부 조항의 내용이 변경돼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의 내용은 지난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별개로 개정됐다.

현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에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 기간을 계약 만료 6개월~2개월로 바꾼 것이다. 당정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할 때 묵시적 계약갱신이 가능한 기간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으로 준용하도록 했다.

내달 10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

2020년 12월 10일 이전

임대차 기간 만료 1~6개월 사이

2020년 12월 10일 이후

임대차 기간 만료 2~6개월 사이

는 기한이 묵시적 계약갱신과 연동된다.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로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는 첫날은 산입하지 않는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른다. 계약 만기가 내년 1월 9일이라면 내달 9일 0시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의미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를 확실하게 하면 된다.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의사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남기면 된다. 구두로 의사를 전달할 경우 집주인이 이후 의사 표명 여부를 부인할 때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집주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고 이후 송사가 진행될 경우,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합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이정필 기자 roman@

현대건설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 돌파

‘힐스 캐스팅’ 부동산 토크 인기

현대건설은 자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힐스 캐스팅’ 구독자 수가 지난 26일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튜브에 본격 진출한 지 1년 만으로 괄목한 만한 성과라는 평가다. 건설업의 경우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상품을 다루기 때문에 일반 소비재보다 수요층이 한정적이며, 콘텐츠 소비 연령 또한 상대적으로 높고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폭도 적고, 동영상 조회 수 또한 높지 않다.

그럼에도 현대건설의 유튜브가 이같은 성과를 나타낸 것은 유튜브 채널을 광고 중심이 아닌 고객과의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창구로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힐스캐스팅의 강점은 ‘힐스 라이프’, ‘부동산 톡zip’, ‘힐스 분양zip’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자체 콘텐츠다. 힐스 라이프는 힐스테이트에서 누릴 수 있는 스타일 리치한 주거문화를 광고, 토크쇼, 단편 드라마 등의 형태로 소개하고 있다. 부동산 톡zip은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토론으로 진행된다.

또 힐스테이트 분양 단지들에 대해 셀럽이나 전문가들이 직접 견본주택에서 내부를 소개해주는 힐스 분양zip 콘텐츠로



어디서나 편안하게 분양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채로운 시도를 통해 수요자들에게 새로움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건설업계 최초로 사이버 모델하우스 언택트 라이브방송인 ‘쌍방향 소통쇼’를 진행해 큰 화제를 모았다. ‘갑천 1 트리폴시티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 오픈에 맞춰 해당 단지에 관심 있는 수요자 100여 명이 언택트 라이브 방송으로 동시 접속, 화면을 통해 분양 관계자와 직접 소통하며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부동산 정보를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영상으로 제작하고, 보다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알찬 정보와 색다른 재미, 그리고 힐스테이트가 제공하는 스타일리치한 라이프스타일을 전해드릴 수 있는 힐스 캐스팅만의 콘텐츠를 만들 것”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주거중심 아닌 경제도시 방점… 성장·복지 이루겠다”

서울 동맥을 가다 ②

이 정 훈 강동구청장

“서울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지만,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30일 강동구청에서 만난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솔직했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강동구는 내년이면 50만 명, 3년 후 55만 명이 거주하게 되는데 비해 생활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다.

이 구청장은 취임 직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많은 자원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올해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강동 점단복합청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현재 6개 동주민센터를 점단 복합청사로 건립하면서 생활 SOC, 수의시설, 행복주택 등을 복합 신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강동 경제지도를 바꿀 사업들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고덕비즈밸리와 강동일반산업단지계획으로 추진하는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고덕비즈밸리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150여 개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

고덕비즈밸리·일반산업단지 조성 20兆 경제가치·11만 고용창출 노동센터 운영… 교복지 지원

생산·소비 갖춘 자족도시 육성 동부 수도권 중심으로 만들 것 둔촌주공 조합 갈등 해소 최선

부터 기업들이 연이어 착공해 사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강동일반산업단지는 디지털 엔지니어링복합단지조 조성할 계획인데요. 2022~2023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경제단지의 조성이 모두 완료되면 20조 원 이상의 경제 가치와 11만여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입니다.”

성장 일변도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자족 능력을 갖춘 강동’을 만들기 위한 이 구청장의 복안이다. 그는 강동구를 주거중심이 아닌 경제도시, 나아가 지역·계층 간 격차가 없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제발전과 함께 복지에도 방점을 찍은 셈이다.

“제1호 공약인 노동권익센터가 지난해 문을 열었습니다. 노동과 인권, 일자리,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자족도시로, 편의시설과 교통인프라 등이 잘 갖춰진 편리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종합 행정기관이죠. 전국 최초 직영, 지방정부 최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교복구매비 지원은 올해 중학교 입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아동노동자를 위한 지

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죠.”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병 관리뿐 아니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분양가 갈등은 강동구가 풀어야 할 숙제다.

먼저 강동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활동과 신속한 공개 정보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겪는 우울감 해소를 위해 ‘심리방역’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상 수거, 임대료 인하 운동, 저소득 노동자 특별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둔촌주공아파트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재건축사업으로 다양한 계층의 민원, 집단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가능한 최대한의 행정력을 집중·지원해 둔촌 조합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입니다. 비슷한 일에도 항상 소통해 왔고, 정면 돌파했던 경험이었으니 이를 잘 살려야죠.”

그는 대표적 사례로 ‘고덕그라시움으로 재건축’을 꼽았다. 15시간의 마라톤 회의와 조합, 시공사 컨소시엄과의 협의를 끌어내 입주 대란을 막았던 경험이다.

이 구청장은 강동을 ‘동부 수도권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자족도시로, 생활SOC 등 편의시설과 교통인프라 등이 잘 갖춰진 살기 편리한 도시로 만든다는 것이다.

“개발이익을 아동과 청소년, 청년, 여성, 어르신, 노동자, 장애인을 위한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투자해 지역과 계층 간의 격차를 줄여 균형 잡힌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청소년도 탈 수 있는 ‘새싹따릉이’ 달린다

송파·강동·은평에 우선 배치… 크기·무게 줄여

서울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게 탈 수 있는 ‘새싹따릉이(사진)’ 500대를 송파구·강동구·은평구에 우선 배치해 운영하고 내년 1월까지 총 2000대를 차례대로 확대·배치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새싹따릉이는 기존 따릉이보다 바퀴 크기가 4인치(24인치→20인치) 작고, 무게는 2kg(18kg→16kg) 가볍다. 바퀴와 바구니 패널에는 새싹을 상징하는 밝은 연두색을 칠해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시인성을 높였다.

새싹따릉이는 지난해 2월 ‘2019 아동 참여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고등학교생이 “현재 따릉이는 성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크기로 획일화돼 있어 어린이도



탈 수 있는 따릉이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서울시가 도입을 추진해왔다.

새싹따릉이 도입과 함께 이날부터 이용연령도 기존 만 15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용자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따릉이와 동일하게 상해, 후유장애, 치료비, 배상책임 등 보험을 적용한다.

서울시는 애초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제로페이’ 할인혜택을 내년 말까지 1년 기간연장과 적정 감면율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따릉이 이용권은 제로페이를 결제하면 일일권과 정기권은 각각 50%, 30% 할인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새싹따릉이는 시민 아이디어에서 시작되고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탄생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며 “이번 시범도입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안전하게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노원구 ‘어르신 한파 쉼터’ 93곳 운영

서울 노원구는 겨울철 한파를 대비해 내년 3월 15일까지 ‘어르신 한파 쉼터’를 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한파 쉼터는 독거노인 등 한파에 취약한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난방시설이 열악한 일반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경로당 74개소와 동 주민센터 19개소 등 모두 93개소를 운영한다.

쉼터 운영시간은 동 주민센터는 평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경로당은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다만, 경로당은 코로나19로 현재 운영이 중단돼 있어 재개 시 개방할 예정이다.

한파 특보 발령 시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야간 한파 쉼터’도 운영한다. 구와 협약을 체결한 호텔 30객실을 안전숙소로 운영해 노인들에게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야간쉼터 이용대상은 담당 동장의 추천을 받은 고령자와 독거노인이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야간 한파 쉼터는 이달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노원구는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들에 대한 안부 확인도 강화한다. 평소에는 주 2회, 한파 특보 시에는 격일로 안부전화를 한다. 독거노인 가정방문도 특보 시에는 주 1회에서 격일로 강화할 계획이다.

수급자, 기초연금 대상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1002명에게도 전기매트 941개, 난방 텐트 182개를 지원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어르신들이 한파 쉼터에서 건강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볕더위와 한파 등 재난으로부터 취약한 구민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채용 기자 mywish73@

동작구, 내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 동작구는 관내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2021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올해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123명의 장애인이 요양보호사 보조업무부터 바리스타까지 다양한 업무에 투입됐다.

내년에는 △구 직접 수행 장애인 일자리 52명 △민간위탁운영 장애인 일자리 82명 △발달장애인 직장적응 체험훈련 9명 등 올해 대비 20명이 늘어난 총 143명으로 확대한다.

직접 수행 일자리분야는 관내 거주 만 18세 이상 사업수행이 가능한 미취업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27명 △시간제 일자리 12명 △복지 일자리 13명 등 총 52명을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다음 달 8일까지

참여신청서, 미취업 사실확인서, 구직등록필증 등 서류를 지참해 구청 어르신장애인과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 사업자등록증 소유자, 정부부처나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작구는 이달 18일까지 △사업참여 경력 △장애 정도·소득수준 △사회활동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23일(수) 구 최종 선발 여부를 통보한다.

선발된 인원은 내년 1월 4일부터 1년간 구청과 동주민센터, 복지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등에서 △행정업무보조 △환경 도우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일제는 223만6720원, 시간제는 111만8360원, 복지 일자리는 59만9320원가량을 받는다. 이채용 기자 mywish73@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산업 배출량 감축”

구·시민감시단 등 54개 단속팀 가동… 4000개 사업장 점검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서울 전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00여 개소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 기간에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시민참여감시단 등이 참여하는 총 54개 단속 TF팀을 가동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하나인 산업 부문의 배출량을 줄인다는 목표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21개소 점검을 강화한다. 도금·도장 업체 등

2000여 개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관리등급을 최근 2년간 지도·점검결과 위반 횟수에 따라 우수·일반·중점관리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점검을 시행한다.

우수·일반등급은 자치구와 시민참여감시단이 현장점검을, 중점등급은 시·구 합동점검을 한다. 점검내용은 각 사업장의 인·허가 사항, 배출시설·방지시설 정상가동 상태, 환경기술인 근무상태, 자가측정상태 등을 점검한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2019개소 점검도 강화한다.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항,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 자치구, 시

민참여감시단이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다. 공사장 방진벽은 제대로 설치했는지, 살수시설이나 세륜시설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토사를 운반할 때 적정량 적재를 했는지와 덮개를 덮었는지 등을 점검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위반행위 적발 시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려 무관용으로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는 기간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분야인 사업장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산업부문 배출량을 낮추고 서울시의 맑은 공기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채용 기자 mywish73@

전기차 시대 : 성패 열쇠는 플랫폼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이번 신차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총 30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1990년대 말, 신차 발표회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발언이다. 그만큼 큰 비용을 투자한 신차라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어느 틈엔가 이런 설명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신차 개발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만큼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됐다. 나아가 ‘플랫폼 공유’도 개발비 감축에 한몫했다.

국산차 최초의 플랫폼 공유차는 1999년 등장한 현대차 EF쏘나타, 이후 등장한 기아차 옵티마다. 같은 엔진과 변속기를 썼고, 두 차가 서스펜션 세팅과 디자인만 차이를 뒀다.

심지어 뒤이어 등장한 옵티마는 EF쏘나타 개발 과정에서 최종 후보에 올랐던, 후보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왔다. 이른바 ‘EF-B 보디’였다. 사실상 옵티마의 개발비는 여느 중형세단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던 셈이다.

◇전기차, 스케이트보드 위에 올라서다=자동차 트렌드가 빠르게 친환경 EV(전기차) 시대로 이동하면서 본격적인 플랫폼 경쟁이 시작했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두 가지 차를 개발하던 그 옛날과 사정이 달라졌다. 플랫폼 하나만 있으면 전체 제품군을 구성할 수도 있는 시대다.

먼저 배터리와 구동 모터 등을 포함한 ‘언더보디’를 하나의 형태로 개발한다. 그 위에 각각 다른 차체를 얹는 방식이다. 이른바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다. 차 바닥에 깔린 배터리를 중심으로 앞 또는 뒤쪽 차축에 구동 모터를 장착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하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다. 개발비용이 적게 들고 부품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출처 canoo

**플랫폼 공유 통해 전체 제품군 구성
설비·인력 감축 등 공정 효율성 높여
현대차, 내년 ‘E-GMP’ 적용 생산**

**경쟁업체·후발주자에 플랫폼 판매
단가 낮춰 가격 경쟁력 확보 시너지**

앞바퀴 또는 뒷바퀴 중심에 달리는 대형 모터도 크기를 줄일 수 있다. ‘인-휠 모터’라고 불리는 소형 모터를 바퀴마다 안쪽에 장착하는 형태다. 이렇게 되면 차 바닥의 공간 활용성은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잘 만든 전기차 플랫폼 하나는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 복덩어리가 된다. 생산 설비와 인력을 줄일 수 있고 공정의 효율화도 가능한 것은 물론 생산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플랫폼 시대가 본격화되면 뭐가 달라지나=플랫폼 만들기가 경지에 다다른 폭스바겐은 일찌감치 내연기관에서도 통합 플랫폼을 선보였다. 엔진과 굴림바퀴(전륜), 실내 대시보드

까지 하나의 틀을 만들었고, 이를 기준으로 여러 차를 내놨다. 이른바 MQB 플랫폼이었다. MQB(Modulare QuerBaukasten)는 엔진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휠베이스와 차폭 등 보디 사이즈와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종류에 관계없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 방식을 밑그림으로 전기차 플랫폼 MEB(Modular Electric Drive Matrix)도 개발했다. 폭스바겐의 전동 모듈화 플랫폼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전기차 모델 I.D.의 파생 모델도 속속 등장할 예정이다. 폭스바겐은 2022년까지 이 MEB 플랫폼을 바탕으로 27가지의 새 모델 투입을 공언했다.

현대차그룹 역시 전기차 통합 플랫폼 E-GMP(Global Module Platform) 개발을 마쳤다. 당장 내년부터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을 통해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4를 선보일 예정이다. 나아가 대형 SUV까지 영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비슷비슷한 차들이 넘쳐날 전기차 시대=자동차는 엔진의 성격과 장착 위치와 굴림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성능을 낸다. 같은 엔진과 변속기를 얹어도 서스펜션의 구성과 엔진의

조율 등에 따라 전혀 다른 차로 둔갑한다.

1990년대 말 등장했던 기아차 비온의 로드스터 ‘엘란’은 차고 넘치는 가속력을 지녔으나 엔진은 당시 중형세단(크레도스)에 얹었던 평범한 직렬 4기통 1.8리터짜리였다. 변속기를 차별화하고 엔진 세팅을 달리한 덕이다.

그러나 앞으로 전기차 플랫폼이 일반화되면 전기차들 모두 차 성격이 비슷해지면서 무색무취의 재미없는 차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가 하나의 개성으로 추앙받아 온 20세기와 달리, 이제 그 가치가 단순 교통 수단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팔아야 살아남는다=제조사 입장에서 잘 만든 플랫폼 하나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낼 수 있다. 플랫폼을 후발주자, 또는 경쟁사에 판매하는 이른바 ‘라이선스 아웃’이다.

먼저 전기차 개발 여력이 없는 자동차 제조사라면 이런 잘 만든 전기차 플랫폼을 하나 구매하는 게 방법이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기차를 개발하기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플랫폼 구매를 통해 자동차 산업에 뛰어 들 수도 있다.

독일 폭스바겐과 한국의 현대·기아차, 일본 토요타, 미국의 GM이 노리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다. 이들 역시 돈만 된다면 경쟁사에도 전기차 플랫폼을 팔겠다는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판매 수익을 넘어 다양한 시너지도 기대된다. 더 많은 플랫폼을 찍게 되면 부품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친환경 전기차 시대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방법이기도 하다.

다만 이런 플랫폼 판매는 결과 못지않게 판매 과정도 중요하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현대차와 기아차가 플랫폼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현대모비스가 이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junior@

모빌리티도 맞춤형 시대... 가구·건축 디자인이 뜬다

**미래차 ‘원-박스카’ 형태 대세 전망
자율주행 기반 운송수단 목적 탈피
휴식공간 구성 등 실내 활용 극대화**

지금까지 자동차 제조사의 디자이너(현장에서는 ‘스타일러’라고 불린다)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린다.

구동 방식에 따라 뒷바퀴 굴림(Front engine Rear wheel drive) FR 자동차 디자이너와 앞바퀴 굴림(Front engine Front wheel drive) FF 차 디자이너다.

“자동차 디자인 대부분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면 오산이다. 디자이너 모두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일 수 있지만, 시장에서 인정받은 역량, 나아가 성공 사례 등을 종합해보면 FR과



통합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와 고도화된 자율주행 시스템이 만나면 자동차 디자인은 ‘원-박스카’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제공 현대차

FF 디자인은 출발점부터 다르다.

FR 자동차는 앞 오버행(앞범퍼와 앞바퀴 중심까지의 거리)이 극단적으로 짧다. 반대로 FF 자동차는 엔진 구성에 따라 이 길이가 길다. 기

본 구성과 특징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시장의 유행을 쫓아가며 균형미를 맞출 수 있느냐가 디자이너의 능력으로 이어진다.

이런 보이지 않는 ‘규칙’은 조만간 점진적으로 흐릿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기차 플랫폼이 일반화되면 자동차의 기능 가운데 실내 활용도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율주행과 전기차가 일반화되면 자동차는 운송수단이라는 기본 목적이 더 커진다. 세련미와 스포티한 감각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게 우선 목표가 된다.

결국, 자동차 디자인은 네모반듯한 이른바 ‘원-박스카’ 형태의 자동차가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대차그룹 역시 이 시점에서 개인에게 맞춤형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스타일 셋 프리(Style Set Free)’ 전략을 세웠다. 전기차와 자

율주행기술이 맞물리면 자동차는 개인화된 디지털 공간, 움직이는 사무실, 편안한 휴식 공간 등으로 기능이 확대된다. 운전자는 운전만 하던 제한된 경험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현대차가 추구하는 모빌리티 방향성 ‘스타일 셋 프리’는 고객이 자신만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인테리어 부품과 하드웨어 기기, 상품 콘텐츠 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이다. 이를 위해 올 초 선보인 신개념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는 한계 없는 개인화 설계 기반의 친환경 이동수단이다. 이동에 걸리는 시간 동안 탑승객은 자신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앞으로 가구 디자이너 또는 실내건축 디자인 전문가가 자동차 회사의 디자인센터에서 중대한 역할을 도맡을지도 모를 일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광고심의필 : 2020-1540-000500



체함 배탈 설사 넌 끝났어

뱃속에서 일어나는
전쟁같은 증상들을 제압한다~
동성제약 **정로환F**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소비자 상담전화 : 080-001-0921

“중개업소 줄폐업 막으려면 세무·법무도 다뤄야”

고상철 미스터홈즈부동산중개 대표

매년 개업공인중개사 10만 명…그중 1만 명은 얼마 못가
美·日처럼 부동산 종합 컨설팅 서비스로 질적 향상 필요

“개업공인중개사 10만 시대입니다. 부동산 중개시장에 새 사고 방식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미스터홈즈부동산중개’가 전문성으로 신뢰를 중개하는, 그 선두에 설 것입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점에서 만난 고상철 (주)미스터홈즈부동산중개 (이하 ‘미스터홈즈 부동산’) 대표는 회사 발전 방향과 포부를 거침없이 밝혔다. 지난해 6월 대표 자리에 오른 고 대표는 한상옥 부대표와 합심해 미스터홈즈 부동산의 회원점을 전국 33개로 끌어올렸다.

미스터홈즈부동산은 ‘선진국형’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중개법인이다. 부동산 개발과 임대관리 기업인 홈즈컴퍼니의 자회사로 2016년 출발했다.

고 대표는 인하대 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강의 활동으로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이미 스타강사로 이름도 날리고 있었다. 이태원 홈즈컴퍼니 대표의 삼고초려 끝에 그는 미스터홈즈 부동산을 이끌게 됐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형 중개 브랜드’ 필요성에 두 사람의 공감대가 형성된 게 결정적이었다.

전국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모두 45만 명. 이 중 개업공인중개사는 10만6000명에 달한다. 부동산 중개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다.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아 꿈의 직업

처럼 느껴지지만 자격증만 갖고 개업했다가 얼마 못가 폐업하는 중개사가 연간 1만 명이 넘는다. 차고 넘치는 중개사무소들 사이에서 이용자들의 간택을 얻으려면 동네 복덕방이 아닌 선진국형 중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고 대표의 철학이다.

그는 “국내 부동산 중개업무는 계약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계약에 대한 책임만 지는 구조”라며 “반면 미국이나 일본 등은 컨설팅, 세무, 변호 업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 질이 좋고 중개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책임을 중개회사가 진다. 서비스 수준이 높다 보니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역시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다”고 지적했다.

미스터홈즈 부동산은 선진국형 서비스를 간판으로 내세운다. 무기는 ‘전문성’이다. 고 대표는 “권리관계나 매물을 분석해 계약만 하는 서비스로는 살아남긴 어렵다. 매도·매수자들의 부동산 지식은 상당히 평준화됐는데 중개 서비스 질은 정체돼 중개보수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이라며 “우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한 차원 높게 매물 및 시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세무사 및 세무업체와 제휴해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급하는 체계도 만들고 있다. 개인이 이 같은 시스템을 만들긴 사실상 어렵다”고



고상철 미스터홈즈부동산중개 대표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동네 복덕방이 아닌 선진국형 중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미스터홈즈부동산중개

말했다.

미스터홈즈부동산은 회원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울에서 제주도 부동산 물건을 거래할 수도 있다. 부동산 정책 홍수 속에 중개사들이 전문성을 잃지 않도록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이날 고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함께 인터뷰에 나선 이 대표는 “회원들 간 실시간 질의가 이뤄지고 있고, 2주 단위로 교육도 실시한다. 최근 세무 특강을 진행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본사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전체적인 업무 퀄리티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수도권과 지방 곳곳으로 네트워크를 넓히며 전력질주하고 있는 만큼 내

년 상반기 100개 회원점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원점이 70개를 넘어서면 TV와 라디오 등 매체 광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다만 무차별적인 개설은 지양한다. 미스터홈즈 부동산은 역세권당 1개 회원점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건강한 부동산 중개를 위해서다.

미스터홈즈 부동산은 해외 부동산시장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달엔 글로벌 부동산 기업인 아이원 프로퍼티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해외사업 확장의 첫 단추를 끼웠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아이원 프로퍼티가 활동 중인 영국·호주·태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현대제철 ‘방구석 드림톡콘’

현대제철은 지난달 28일 회사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020 현대제철 방구석 드림톡콘’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2018년부터 문화·예술 인프라가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업장 소재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공연을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존에 진행해 오던 오프라인 방식의 공연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콘서트 무대는 서울 도곡동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갤러리에 꾸며졌으며,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포항·당진·순천 지역의 중고등학생 60명을 화상으로 연결해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주혜 기자 winjh@



볼보, 장애아동 지원 3억 기부

볼보자동차코리아가 30일 장애 어린이 지원사업을 위해 푸르메재단에 기부금 3억원을 전달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2017년부터 선천적인 요인이나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겪고 있는 어린이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 비영리재단인 푸르메재단과 협약을 맺어 기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전달되는 기부금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 어린이와 청소년 100명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과 함께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다. 유창욱 기자 woogi@

부음

▲박정임 씨 별세, 강창희 씨 부인상, 경신(강서구립 뚝섬도서관팀장)·유주(한국일보 기자) 씨 모친상, 신영희 씨 시모상, 정윤철(동아일보 기자) 씨 빙모상 = 29일,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2월 1일 오후 1시, 02-2152-1349

▲김제덕(영남일보 기자) 씨 별세 = 29일, 경북 영주시독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2월 1일 오전 9시, 010-9485-6361

▲정진구 씨 별세, 정은영(HSBC코리아 대표) 씨 부친상 = 29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일 오후 1시, 02-3410-3151

‘젊은 엄마들’로 꾸려진 바이든 대변인팀

젠 사키·케이트 베딩필드 등
美 역사상 첫 7명 전원 여성
그중 6명은 30·40대 워킹맘



임명됐다.

이 외에 백악관 부대변인에는 캠프 선임 보좌관을 지낸 카린 장-피에르, 부통령실 공보국장에는 애슐리 에티엔, 공보부국장에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히스패닉 미디어 담당관을 맡았던 필리 토바가 임명됐다.

42세의 사키는 트위터에 “우리 팀은 가장 능력 있고, 검증된 6명의 젊은 엄마들”이라며 “바이든 당선인과 다시 일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의 트위터 소개란엔 “다섯 살도 안 된 두 아이의 엄마”라고 적혀 있다.

자신을 “두 남자아이의 엄마”라고 표현한 알렉산더 역시 “바이든 행정부에 포함돼 영광이며, 전략적 대변 업무를

맡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오바마 사람이었던 사키는 정권 교체 이후엔 CNN방송의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인물이다. CNBC방송은 그를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세 번의 대선 캠프에 몸을 담은 캠프 베테랑으로 소개했다.

베딩필드는 2006년 민주당 선거운동위원회 언론 비서를 시작으로 2008년 상원의원 선거, 2012년 오바마 캠프 등을 거쳤다.

바이든 당선인은 성명을 통해 “전부 여성으로 구성된 최초의 백악관 대변인팀을 발표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변인 팀은 국민과 백악관을 연결하는 엄청난 책임을 맡게 된다”며 “이들은 그럴 자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만큼 미국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고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대영 기자 kodae0@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도로관리과장 나웅진 △철도운영과장 오수영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이창희 ◇과장급 임용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권영민

◆넥센그룹 ·넥센타이어 ◇BG(Business Group)장 승진 △글로벌생산BG장 조상문 ◇BS(Business Sector)장 승진 △유럽 영업1 BS장 김대중 △선행연구BS장 김종명 △미국법인마케팅팀

당 노재훈 ·넥센 ◇전무 승진 △청도넥센상고 총경리 신용우 △경영관리본부 본부장 문성희 ◇이사 승진 △청도넥센상고 생산담당 설점수 △Logis사업부 물류운영담당 강동조

◆태영그룹 ·태영건설 ◇부사장 △배종건 △우철식 △최인호 ◇전무 △김도훈 △이강석 ◇상무 △정경섭 △정장모 ◇상무보 △안치열 △최성욱 ·TSK코퍼레이션 ◇상무보 △김창하 △김성기 ·TSK위터 ◇상무보 △강광원 △신동운 ·TSK엠에스 ◇상무보 △김재영 ·블루윈 ◇부사

장 △김춘수 ·태영인더스트리 ◇사장 △변대수 ◇전무 △조태홍

◆대보그룹 ·대보건설 △이사대우 한성 ·대보실업 △이사 고동수 ·대보정보통신 △상무 배병우 △이사대우 김현성 오익환 한상옥 ·대보유통 △이사대우 이동환 한제영 ·서원래저 △이사대우 정석천 ·대보그룹 기획조정실 △이사 정승인 ◆애경그룹 ◇신임 대표이사 승진 △AK플라자 대표이사 김재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송병호 ◇전무 승진 △코스파김성호(대표이사) △애경유화 이종화 ◇상

무 승진 △AK캠텍 김성완 김준형 ◇임원 승진 상무보 △AK홀딩스 이상신 △제주항공 윤성용 △AK아이에스 김영근 ◇임원 이동 △AJP 상무보(현, 애경산업) 최윤희 ◇그룹 전임 △애경산업 전무 선보경, 상무보 정창원 △AK플라자 상무보 김영훈

◆씨젠 △정보과학연구소장 이준영 ◆한국GSK △사장 립 캠프턴 ◆아주경제 △정차·경제 부국장 겸 아주닷컴 국장 이주엽 ◆충남일보 △편집국장 김윤석



AK플라자 대표이사 김재천 애경개발·AK레저 송병호

애경그룹은 AK플라자와 애경개발, AK레저의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하는 등 대표이사 및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표이사 신규 선임 2명을 포함해서 전무 승진 2명, 상무 승진 2명, 임원 발탁 3명, 신규 영입 3명, 이동 1명 등 총 13명의 임원이 승진 및 이동 발령됐다.

먼저 김재천 제주항공 부사장이 AK플라자 대표이사로, 송병호 제주항공 호텔사업본부장 상무가 애경개발(겸 AK레저) 대표이사로 승격 이동하며 2명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한편 애경그룹은 5월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대응 차원’으로 주요 5개사 대표이사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이번 인사 역시 상반기 그룹 인사의 연장선에 있으며 코로나 19 이후 대비를 위한 고객지향적 혁신을 실행하기 위함이다.

특히 AK플라자의 수장을 맡게 된 김재천 선임 대표는 2009년 애경그룹에 입사해 AK홀딩스, 제주항공을 거친 소통에 탁월한 인사 전문가다.

이번 인사를 통해 현장 직원과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제주항공에서 성공시킨 혁신적인 사업모델의 성장 DNA를 AK플라자에 이식시켜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 혁신을 이뤄낼 계획이다.

남주현 기자 jooh@

기고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용자를 내세워 싸우고 있는 거대 IT 기업, 그들의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는 음악·미술·문학 창작자들에 관한 관심은 거의 없다. 기업의 수익을 올리는 데만 혈안이다.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에 있는 공정이용제도를 활용, 저작물을 허락 없이 무료로 이용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그 피해는 우리와 후대에 돌아가지 않을까.

#1. 최근 정보기술(IT) 산업 생태계에서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대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9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페이스북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취소소송에서 이겼다. 이 소송은 방송위의 상호접속고시 변경에 따라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KT·LGU·SK브로드밴드 등)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 페이스북·구글 등)에 대해 망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자 기존에 망사용료를 내지 않던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해외로 바꿈으로써 시작됐다. 방송위는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의 페이스북 접속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을 과징금 부과 사유로 삼았다.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지만, 인터넷 트래픽에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 국내 CP(네이버·카카오 등)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2. 넷플릭스는 코로나 시대 이른바 대표적인 언택트 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작곡가·작사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에 적용하는 음악저작권 사용료율을 국내 OTT(웨이브·티빙 등)에 적용하러 하자 국내 OTT 사업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당사자는 다르지만 일견 모순돼 보인다. 국내 CP는 정부가 해외 CP를 봐준다면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고, 국내 OTT는 해외 OTT보다 좋은 조건으로, 즉 차별 대우를 해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국내 기업들은 역차별이 있다고 주장한다. 차별과 역차별은 정의와 평등 개념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10월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한 데서 뜻밖에도 국내 통신사와 관련된 혐의가 나타났다. 최근 구글 인앱결제 강제

책이 관심을 받는 가운데 인앱결제 수수료 30%의 절반인 15%를 국내 통신 3사가 결제수단 제공 대가로 받아왔음이 밝혀진 것이다. 각기 통신서비스 품질 확보, 시청료 인상요인 억제, 글로벌 스탠더드 등 그럴싸한 주장을 하면서 때로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시청자 등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기도 하지만, 한 꺼풀만 걷어보면 해당 기업의 수익을 올리는 데 혈안임을 알 수 있다.

차별·역차별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누가 약자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다. ISP와 CP 싸움에서 정작 소외된 집단은 창작자이다.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저작권법은 창작자보다 더 약한 지위에 있는 이용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공정이용(fair use)이란 제도를 두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이 제도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주체는 초거대 기업인 구글이다. 구글로 트래픽이 몰리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지식검색인데,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무료로 이용하여 빅데이터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

이 공정이용 제도이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 법원이 몇 건의 중요한 공정이용 재판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작은 물고기만 잡아낼 뿐 초대형 빅데이터 기업은 빠져나가는 성근 그물망이 되어 버렸다는 한탄이 나올 만하다. 인터넷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대 기업, 방송사 등은 자기들끼리 이용자를 내세워 싸우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는 음악, 미술, 문학 창작자들에 관한 관심은 거의 없다. 여기에는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에 창작자들이 적응한 탓도 없지 않다.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기 어려운 창작자들이 이들 기업을 통해 때로는 무료로 자신을 알리는 데 급급하다 보니 더욱 존중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창작물은 사은품(gratitude)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영혼이 들어 있지 않은 문학, 기계가 찍어내는 단조로운 음악과 미술만이 난무할 경우 그 피해는 우리와 후대에 돌아가지 않겠는가.

정책발언대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부교수



성별영향평가는 2004년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10개 과제 시범사업에 이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관련법의 명칭이나 사업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법령과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성차별적 요인이 있는지를 살피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법이 평가하는 대상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조례 규칙 등 제·개정 법령,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그리고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업이다. 정책과 법,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부 정책 전반에서 성 평등이 실현되게 하도록 성별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 의제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제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법령과 계획의 경우, 사전에 성인지 감수성에 근거한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성차별이 유지

성인지 감수성 높이는 ‘성별영향평가’ 관심 필요

되고 재생산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몇몇 사례만 보아도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데 성별영향평가가 기여해온 바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육이 여성의 몫이라는 가부장제적 인식을 타파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일터에서의 차별, 여가와 사회 활동에서의 차별은 물론 가족 내 차별과 가정노동의 일방적 부담 등 다수의 문제가 이에 관련 있다. 이처럼 오래된 차별에 저항하려는 시도는 일상생활의 사소한 보이는 영역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남성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 영유아 보조 변기를 설치한 사례나 공무원 육아휴직제도에서 남성과 여성이 받을 수 있는 휴가 기간이 달랐던 것을 남녀 모두 3년으로 변경한 사례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양육이 여성의 몫이라는 전제를 당연시하여 만들어진 낡은 제도를 성별영향평가

를 통해 개선하여 우리 사회의 성 평등한 돌봄과 양육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각종 홍보 사업에서 홍보물이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지, 젠더폭력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외모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는지, 그리고 가족 구성에 관한 고정관념을 전달하는지 등을 평가하고 개선 제안을 하고 있다. 대체로 홍보물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표준 인간형을 남성으로만 제시하거나, 여성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남성이 전문가의 위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등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미지 전략을 구사한다는 데 있었다. 이는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문제여서, 적극적인 문제 제기과 개선안 제시를 통해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영역이다.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이 어떻게 인식됐는지를 드러내고 성평등한 재현은 어떤 것이며 우리 사회가 바라는 성평등한 미래의 모습은 어

떤 것인지를 상상하고 제시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전통적 성별 고정관념이 강한 지역 문화에 대한 개입 역시 중요한 성과이다.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는 경우 배우자의 동기가 있어야 농어업경영체의 공동 경영주로 등록 가능했던 시행규칙이 2017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배우자 동의 조건을 삭제하고 정비하는 개선을 이루었다. 이처럼 성별영향평가는 과거 당연하게 여겨지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했던 우리 사회의 성별 고정관념과 이에 근거한 각종 구조적 차별을 인지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이에 근거하여 공공 정책의 변화를 끌어낸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이다. 성별영향평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책과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개선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이므로, 실행 상의 난점을 극복하면서 성적 평등 관점에서 정부 정책을 제대로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과 제도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리트레비노 명언
“신은 누구에게도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는다.”
미국 프로 골퍼. 6개의 메이저 챔피언십과 29개 PGA 투어 이벤트에서 우승했다. 그는 U.S. 오픈, 오픈 챔피언십, PGA 챔피언십에서 두 번 우승한 네 명의 선수 중 한 명이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39~.
☆ 고사성어 / 각자무치(角者無齒)
‘뿔을 가진 자는 이가 없다’는 말. 한 사람이 모든 복을 받거나 재주를 갖추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날카로운 뿔을 가진 동물에게 이는 필요 없다. 적에게 대항하거나 다른 동물을 공격할 때 뿔이면 충분하다. 날카로운 이를 가진 동물 또한 뿔은 필요 없다.’ 출전 좌씨전(左氏傳).

☆ 시사상식 / 비만세(Fat Tax)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제품에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했다. 비만이 생산성을 저하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준다는 명분으로 포화지방 1킬로그램당 16덴마크 크로네(약 3400원)의 비만세를 부과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탄산음료 등 비만을 유발하고 건강을 해치는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 속담 / 제대의 한 수는 때늦은 백수보다 낫다
해야 할 때 한번 잘 처리하는 것이 일을 그르친 뒤에 백 번 손대는 것보다 낫다.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처리하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

☆ 유머 / 전문가 솜씨
중국집에서 나는 우동, 두 친구는 짜장면을 시켰다. 주문받은 웨이터가 주방에 대고 “우짜짜!”라 소리쳤다. 다른 자리 7명은 우동 셋에, 짜장 넷. 그는 바로 “우짜, 우짜, 우짜짜!”라 외쳤다. 20명 단체 손님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젓가락을 놓고 그를 지켜봤다. 주문도 각양각색. 짜장3 우동4 짬뽕2 당수육2. 웨이터가 이번엔 주방에 대고 더 큰소리로 외쳤다. “어이~ 니도 들었제?”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산업계에 산적한 문제들은 고차방정식의 함수를 푼다. 여러 변수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식의 결과를 바꾼다. 1·2차 방정식에서라면 흑이나 가능할지도 모를 암이나 ‘때려 맞추기’식 함수도 도무지 불가하다. 변수가 많아지고 차수가 높아질수록, 여러 머리를 맞대는 것이 최선이다. 중고차 시장 해법이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이유도 이와 같다. 6년간 중소기업 업종으로 보호받았지만, 허위매물, 가격 뺑튀기 등의 문제가 반복됐다. 소비자 80% 이상이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하고 낙후돼 있다고 생각한다. ‘소상공인’이라는 변수를 챙기다 ‘시장 건전성’과 ‘소비자 후생’이라는 변수가 뒤로 밀린 셈이다.

기자수첩

노우리 산업부/hwe1228@



중고차시장 ‘고차방정식’ 정부도 나서라

최근 분위기가 급변했다.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부적합’으로 의결했다. 대기업 장악력이 크지 않다는 점과 소비자 후생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 부처는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허용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완성차 업체 역시 시장 신뢰도가 올라갈 기회라고 반긴다. 소비자들도 우호적인 반응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난제였던 고차방정식이 다 풀린 것만 같다는 환상에 빠진다. 해결하지 못했던 변수 두 개, ‘시장 건전성’과 ‘소

‘김치종주국’ 외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다

중국이 자국의 김치 제조법을 국제 표준단체인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에 맞춰 제정했다고 환구시보(環球時報)가 보도하면서 김치 종주국 논란이 일었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매체임을 감안해야겠지만 환구시보는 “중국이 주도해 김치 산업의 6개 식품 국제 표준을 제정했고, 이번 ISO 인가 획득으로 김치 종주국인 한국은 굴욕을 당했다”고 전했다.

일부 국내 언론은 중국 현지 특파원들의 보도를 전하면서 중국의 ‘김치 공장’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러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중국 측의 오류와 억지주장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우리 김치(Kimchi)에 관한 식품 규격은 2001년 유엔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산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회원국들이 이미 국제 표준으로 정한 바 있다”며 “이번에 ISO 제정 내용은 ‘쓰촨의 염장채소인 파오차이에 관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제기한 ‘원조’ 논란은 이미 19년 전 끝난 사안이라는 얘기다.

물론 한국의 김치가 사스에 이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전 세계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으로 주목받으면서 생겨난 해프닝일 거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찻잔의 기분이 남는 건 사실이다. 김치 종주국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9년 이래 지난해까지 10년 연속 김치 무역 적자를 기록해왔다. 김치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5배 가량 많은 데다 수입물량의 99% 이상이 중국산인 점은 중국에 ‘김치 공장’의 별미를 제공할 만하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중국산 수입이 줄고 해외 김치 수요 증가로 수출은 늘

데스크칼럼

이 효 영

부국장 겸 유통비이오부장



어 무역 역조가 상당히 해소되고 있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일본과도 오랫동안 ‘기무치’로 논쟁을 벌여온 바 있고 이미 한국 김치 시장에 몰 밀듯이 밀고 들어온 중국마저 이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인 만큼 우리만 종주국을 외친다고 종주국 지위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음식 종주국을 빼앗긴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보통 위스키 하면 스카치 위스키를 떠올리지만 원조는 아일랜드다. 1171년 잉글랜드 헨리 2세의 군대가 아일랜드에 갔을 때 이곳 주민들이 아스키보(‘생명수’라는 뜻)라는 증류주를 마시고 있었고, 이 술이 위스키의 선조가 됐다. 오래전 스카치 위스키 업체의 초청으로 스코틀랜드를 방문했을 때 그 업체 마케팅 임원은 “위스키를 만든 나라는 아일랜드이지만 지금은 스카치 위스키가 세계 최고”라며 “아일랜드인들이 스코틀랜드에 위스키를 전해준 게 최대 실수”라는 농담을 했다.

와인 역시 비슷하다. 프랑스 와인이 세계 최고의 와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와인의 종주국은 이탈리아다. 고대 로마 시대 기원전 800년부터 지금의 토스카나 지방에서 포도를 재배해 3000년의 와인 역사

를 자랑한다. 로마의 줄리우스 카이사르가 프랑스의 옛 땅인 갈리아를 정복한 후 포도나무를 심고 양조 기술을 보급한 덕택에 오늘날 프랑스가 와인 종주국 행세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내의 김치 연간 소비량은 180만 톤(2018년 기준)으로 추산되는데 중국산 김치가 30만 톤씩 수입되고 있고 코로나19 같은 특수상황이 없다면 계속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중국이 다른 산업에서 보여온 ‘굴기’를 감안할 때 물량과 가격 경쟁력으로 무장해 코로나19 이후 위상이 높아진 김치를 다른 나라에까지 수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으로 11월 22일 ‘김치의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식까지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까지 참석한 이 자리에서 김현수 장관은 “앞으로도 민간과 계속 협력해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게 불과 며칠 전 일이다. 농식품부는 김치의날 기념식 같은 보여주기 행사 말고 이번 기회에 농가와 김치 제조 기업들에 생산과 수출 등의 정책적인 도움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궁금하다.

김치는 단순히 음식만의 의미가 아니다. K팝, K드라마에 버금갈 만한 ‘K소프 트파워’의 핵심이다. 김치산업을 프랑스의 와인·영국의 위스키·덴마크의 치즈산업 같은 국가전략 산업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이 김치의 표준’이라는 구호와 자부심에만 사로잡혀 있다가는 야금야금 뚫리고 있는 구멍에 김치 종주국이라는 독이 언제 무너질지 모를 일이다.

hylee@

잠금해제 된 ‘남영동의 공포’

하유미의 고공비행



정치경제부 정치팀장

대공분실, 남영동, 제5공화국...

최근 정치권에서 1980년대를 공포에 떨게 했던 단어들이 언급되고 있다. 그만큼 뒤송송하다는 얘기다.

유독 이 단어들은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힌다. ‘1987’ 등 군부 독재 시절 끔찍한 고문과 인권 탄압으로 악명 높았던 남영동 대공분실 당시 상황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잘 표현한 영화 탓이기도 하다.

어둠만이 존재하는 이곳, 젖은 바닥, 거친 숨소리와 괴로운 비명 등으로 표현된 말도 안 되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마치 내가 겪은 듯한 충격과 같이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공포에 떨게 한다.

고 김근태 전 의원이 군사정권에 맞서다가 20일 넘는 물고문과 전기고문에 피를 쏟았던 그곳. 고문 후유증으로 별세한 김 전 의원이 “지옥이었다. 물고문이 설치된 나치 수용소. 시간이 멈춰 버린 영원한 저주의 세계”라고 표현한 이곳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을까. 이런 무시무시한 대공분실이 15년 만에 다시 부활할 수도 있

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들린다. 더불어 민주당이 최근 ‘법안소위’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다. 대공수사권을 향후 경찰수사를 총괄 지휘·감독할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겠다는 의미다.

대공수사는 그동안 국정원, 국군 안보지원사령부, 경찰이 하며 각 기관 간 상호 감시와 견제, 균형을 맞춰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돼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뿐 아니라 민간 영역의 대공수사는 경찰이 독점하는 구조로 바뀔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야권에서 울려 퍼진다. 즉 정권이 정보를 독점한 경찰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치독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5공 회귀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포인트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국정원법은 국내정보와 수사를 분리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경찰에서 국내정보와 대공수사권을 재결합시키고 있다”면서 5공 경찰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적했다.

이미 국정원은 국내정보를 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비대해진 경찰이 국내 정보까

지 독점하게 되면 ‘경찰공화국’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것. 여기에 대공수사권까지 가져오면 정말로 남영동 대공분실이 부활한 5공 시대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이 두려워하는 것은 정권이 정보를 독점한 경찰을 이용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다. 하지만 국민은 국가 안보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어떤 판단을 할 수는 없다.

다만 ‘군사정권 시절 회귀’라는 표현만 들어도 박종철 열사를 죽인 치안본부가 부활하는 건 아닌지 그저 두려울 뿐이다.

여야의 합의에 앞서 국민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설명이 전제돼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하다못해 공청회나 토론회라도 진행됐어야 하는 건 아니었을까.

이 개정안이 통과됐을 경우 우리는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는지,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등에 대한 쉬운 표현의 설명이 필요할 뿐이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견고한 내부통제장치 마련 등을 함께 서둘러준다면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남영동 대공분실이 부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jscs508@

사설

생산·소비·투자 다시 후퇴, 기업 옥죄기 멈춰야

지난 9월 반짝 회복세를 보였던 국내 산업의 생산과 소비, 투자가 10월에 다시 꺾였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뒷걸음질했다는 점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다. 한 달 전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궤도에 진입했다”던 정부의 낙관적 주장도 무색해졌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서 10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 농림어업 제외)은 9월 대비 0.0%로 부진했다. 보험세이긴 하지만 광공업 생산이 -1.2%, 제조업이 -1.3%였다. 거리두기 1단계로의 완화 조치로 서비스업 생산이 1.2% 늘어나 이를 상쇄했다.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매 판매액도 -0.9%를 기록해 7월(-6.0%) 이후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설비투자 또한 -3.3%, 건설기성은 -0.1%를 나타냈다.

주요인 제조업 부진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특히 경제를 지탱해온 반도체 생산이 10월 -9.5%로 큰 폭 줄어 경기 부진의 장기화를 예고한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3.7%로 전월(73.9%)보다 낮아졌다. 게다가 그동안 회복세를 보였던 소비까지 가리앉고 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의 판매가 -5.7%로 많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그나마 현재와 향후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각각

98.3, 101.8로 전월보다 0.5, 0.4 개선했다.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경기 판단이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국내외의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앞으로 산업활동이 더 위축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주일 전부터 300명 이상으로 급속히 늘어났고, 지난주 500명 대를 지나 400명 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α’로 격상됐다. 서비스업에 직격탄으로 작용하면서 소비가 급속히 후퇴하고, 제조업 생산도 계속 악화할 공산이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긴급 편성, 내년 2월 설연휴 이전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현금 지급을 되풀이하는 것은 당장의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효과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더 급한 것은 정부·여당이 쏟아내고 있는 규제법안으로 기업을 옥죄는 일부터 멈추는 일이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경제계가 그토록 반대하는 규제에 더해, 노사 갈등과 기업 부담만 키우는 노조 관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탄력근로나 선택근로 등의 대안도 없이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무제도 내년 부터 강화할 움직임을 보인다. 이러서는 기업 생산도, 투자도, 소비도 살아날 수 없고 경기는 더 가리앉는다.

특허, 특허! 中企 ‘기술탈취’로부터 보호하려면

코닥 필름은 폴라로이드에 즉석카메라용 필름을 공급하다가 1976년부터 즉석 카메라를 직접 생산했다. 문제는 이 제품이 폴라로이드 특허를 침해, 10년에 걸친 법적 분쟁 끝에 1조 원을 손해배상으로 물어야 했다. 천하의 코닥에도 큰 타격이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얼마 전 현대중공업이 엔진용 피스톤을 납품하던 삼영기계의 기술을 빼돌렸다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억7000만 원을 부과받은 일이 있다. 현대중공업이 기술도면을 받아 다른 곳에 넘겨, 삼영의 한 해 매출액이 180억 원 줄어든 결과에 대한 제재가 겨우 이 정도다.

개발된 기술은 특허로 보호하고, 특허 침해가 있으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개정 특허법에서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라더라도,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만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호소가 매년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소기업은 특허비용이 부담되어 출원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어렵게 특허를

받아도 대기업이 특허기술을 침해하는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 그나마 2014년 이전까지는 절반 정도 이겼지만 2015년 이후로는 15%를 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니 손해배상 등 침해소송에 들어가면 2015년 기준으로 가처분 소송 1건을 제외하고 본안소송에서 중소기업이 100% 패배했다. 특허 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이 논의되자 대기업이 대형 특허법인과 법무법인을 동원해 적극적인 심판과 소송 대응에 나섰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증거수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입법과제로 독일식 전문가 증거수집 제도 등을 제시한다. 다만 심판, 소송비용은 외국기업을 상대로 하는 중소기업에만 지원한다.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일 것이다. 그러자 최근 경기도가 나섰다. 도내 중소기업이 특허 관련 심판이나 소송을 하게 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이 메울 수 없는 빈틈을 찾는 노력은, 이처럼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반가워요!
둘만의 새 출발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조금 서툴러도 걱정 마세요
복잡했던 세탁을 버튼 하나로
심플하게 끝내주는
그랑데시^{AI}가 있으니까요



새로운 시작
AI로 맞추다
삼성 그랑데^{AI}

가전을 나답게.